

혁신주도형 경제를 위한 전략과 과제

- 발표 서중해 (한국개발연구원)
- 토론 송영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갑수 (산업기술재단)
주 현 (산업연구원)
백성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안덕근 (서울대학교)
박정동 (인천대학교)

혁신주도형 경제를 위한 전략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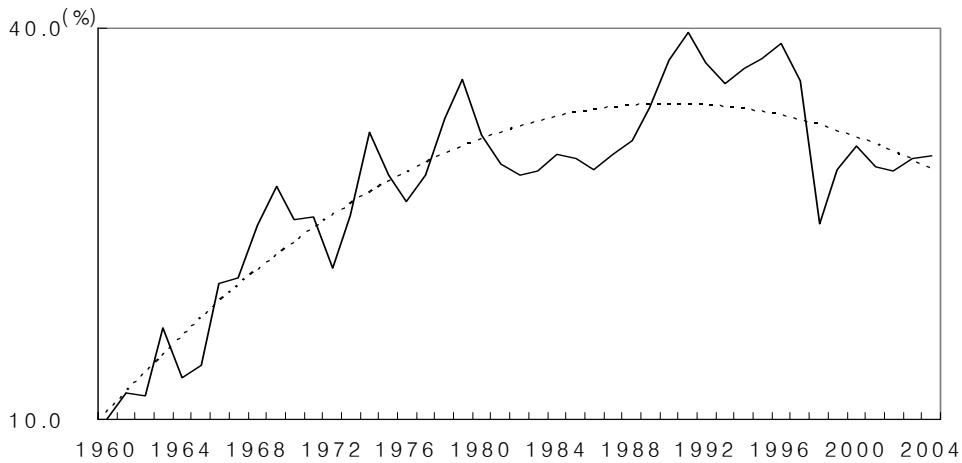
발표 : 서중해

제1장 성장동력의 확충

1. 현황 및 문제점

- 우리경제의 최근 성장패턴은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음
 - ① 저성장·저고용 : 경제성장률 저하와 함께 성장의 고용창출효과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② 탈공업화 : 제조업의 고용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부문의 고용비중은 확대되고 있으나,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생산성 증가는 부진
 - ③ 산업양극화 : 중화학공업-경공업, 수출부문-내수부문, 대기업-중소기업 등 산업간 및 산업부문내 기업간 생산성 및 수익성 격차가 확대
 - ④ 산업공동화 가능성 : 설비투자가 부진한 반면, 해외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내투자와 해외투자의 대체현상이 부분적으로 발생
- 이러한 우리경제 성장패턴은 경제발전단계의 성숙과정에서 오는 구조적 요인 및 세계화 등 대내외적 환경 변화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
 - 과거 요소투입 주도의 산업화단계에서는 새로운 산업이 계속 생겨나고 이에 필요한 설비투자·산업인력 수요가 크게 증가되면서 경제가 성장
 - 산업구조가 성숙됨에 따라 투자기회가 줄어들고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출산율 저하 및 고령화, 근로시간의 단축 등 노동공급의 증가도 둔화됨에 따라 요소투입 중심의 성장은 지속되기 어려운 여건

[그림 1] 총투자율의 장기 추세, 1960~2004



주: 총투자율(실선)은 GDP 대비 총고정자본형성으로 계산,
점선은 2차회귀식으로 추정된 추세선

-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 중국 등 저임금국가의 급부상 및 세계화의 전개 등 외부 환경 변화는 산업·기업 성장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산업간·기업간 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ICT의 급속한 발전은 ICT산업의 비중이 확대되는 한편, ICT를 활용하는 부문과 그렇지 못한 부문 사이의 격차를 확대 (“digital divide”)
 - 중국의 산업화는 우리 경제의 저숙련·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쟁력을 급속하게 잠식하여 구조조정 압력으로 작용하는 한편 기술집약적 산업의 시장기회를 확대시켜, 기술변화와 함께, 산업 양극화 초래
 - WTO 규제로 정부 직접 지원 영역은 제한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기업가정신과 창의성 활용을 극대화할 필요
 -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출되는 인력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확대, 재훈련 비용의 증대 등으로 재정적 부담이 급증할 전망.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 지연될 경우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필수적인 지식자원의 육성에 대한 자원배분이 지연될 우려
- 우리 경제는 과거의 성공적 산업화 과정에서 축적한 자산을 보유한 반면, 과거의 유산이 온존하여 새로운 도약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약점을 동시에 갖고 있음

- 높은 교육열·투자와 이로 인한 우수한 인적자원이 풍부한 점은 우리경제의 강점으로 향후 발전 과정에서도 여전히 소중한 자산
 - 반면,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교육개혁의 부진 및 창의적·혁신적 인재 풀이 취약
- 짧은 기간의 산업화는 국민의 높은 저축률 및, 이에 기초한, 높은 투자율에 의하여 가능하였고, 이 과정에서 단기간의 자본축적에 성공
 - 산업화 과정에서 이차적인 지원기능에 치우친 금융부문은 혁신금융을 주도할 금융인력 육성에 소홀하였으며, 자본의 과잉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기술과 금융의 접목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 일부 제조업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기술적 우위로 시장을 선도하는 대기업이 존재하는 반면, 상당수 중소기업은 하청생산방식에 의존하고,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은 제조업의 절반 수준
- 제조업 중심의 발전 전략은 주요 거점에 산업단지를 구축하고 기능 인력을 양성해왔으나, 지역적 편중이 심하고 지역이 혁신동인 역할을 수행하여 자체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내재적 발전기제로 정착하지 못함
- 1990년대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ICT산업을 육성하고 정보사회 건설에 필요한 정보인프라 구축에는 성공하였으나, 원천기술의 취약으로 핵심기술의 대외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상태임
 - 제조·기기 중심의 ICT산업 발전전략은 정보통신강국으로 급부상하였으나, 콘텐츠·소프트웨어 부문은 취약
- 짧은 기간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체제를 구축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R&D비용 급증에 따른 투자효율성 저하 문제에 당면
- 정부 주도로 시장경제 제도 구축에 성공하였으나, 법·제도는 여전히 세계적 수준에 미달하고 창의적 개발유인으로 작동하는 데는 미흡
- 한류 확산으로 국가이미지는 상당히 향상되었으나 한류기반 및 후속모델이 취약하여 지속 여부는 불투명하며, BRICs의 성장은 우리에게 새로운 수출 시장 확대 기회이면서 경쟁우위 상실의 위협요인으로 작용

<표 1> 우리 경제의 현황

	강점	약점
투입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교육열·투자, 우수한 인적자원 • 단기간의 자본축적 성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적·혁신적 인재 풀 취약 • 혁신금융기능 취약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적 대기업이 존재 • 해외시장 경험 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취약 • OEM함정에서 탈피하지 못함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제조 경험 및 능력 축적 • 전자·자동차·선박 등 일부 부문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 부품·소재 부문의 취약 • 탈공업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은 낮음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의 발달 • 지역산업·대학의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적 편중이 심함 • 내재적 발전기제 취약
대내 환경·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T산업과 정보인프라 발달 • 민간의 높은 R&D투자 • 정부 주도로 시장경제 제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천기술 취약으로 높은 대외의존도 • R&D비용 급증으로 투자효율성 저하 • 창의적 개발유인 미흡
대외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류 확산으로 국가 이미지 향상 • BRICs 성장으로 잠재수출시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류기반 및 후속모델 취약 • BRICs 성장으로 경쟁우위 잠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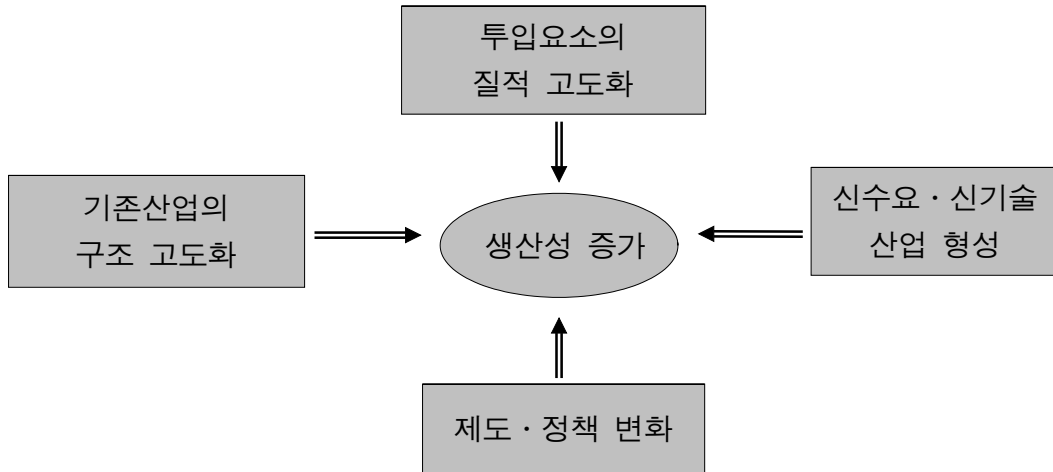
2. 여건 및 전망

가. 여건

- 우리경제는 요소투입 주도의 고도성장단계를 지나 생산성 중심의 혁신주도형 발전단계로 전환하는 과정
- 혁신주도형 경제는 “투입요소의 질적 고도화와 함께, 경제 전반의 생산성 증가로 성장이 지속되어 국민의 삶의 질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경제”로, “혁신”은 생산성 증가의 원천으로 정의
 - 혁신주도형 경제에서는 성장률은 과거에 비해 낮아져도, 국민 일인당 실질부가가치는 상승하여 삶의 질은 지속적으로 향상
 - 생산성 증가의 원천으로서 혁신은 R&D를 통한 기술혁신, 디자인·브랜드 등 이미지혁신, 조직혁신, 제도혁신 등 다양한 양태로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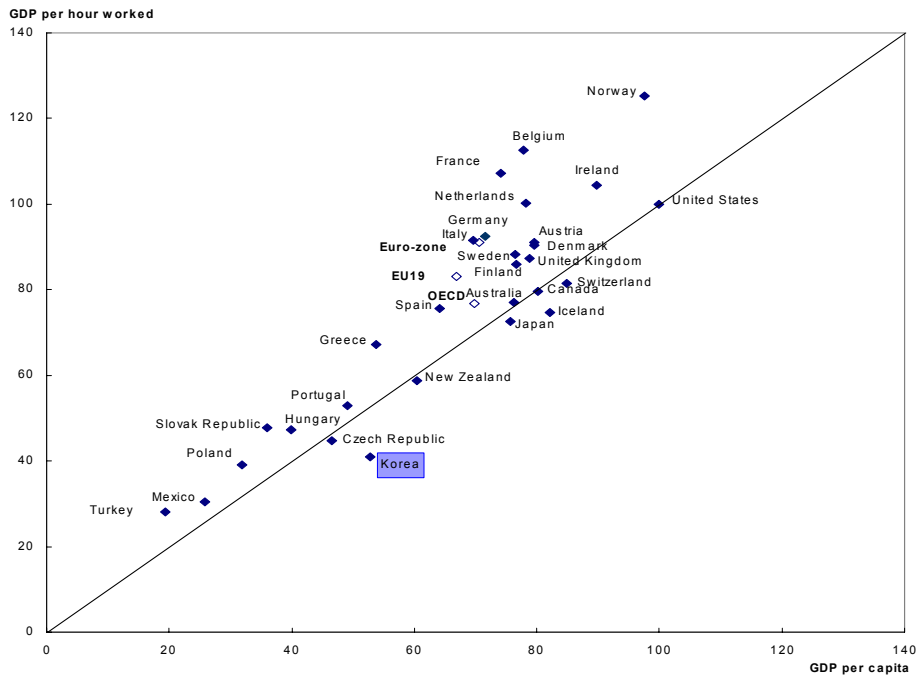
- 혁신주도형 경제의 외연은 ① 노동, 자본 등 투입요소의 질적 고도화, ② 서비스부문을 비롯한 기존산업의 구조고도화, ③ 새로운 수요·기술에 따른 신산업의 형성, ④ 규제개혁, 개방화 등의 제도·정책 변화 등을 포괄

[그림 2] 혁신주도형 경제 : 개념도



- 2004년 현재 우리나라는 1인당 GDP는 미국의 51%, 근로시간당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41%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나, 반면 선진국과의 생산성 격차는 추격성장의 여지가 여전히 있음을 의미

[그림 3]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2004년, 미국=100)



자료: OECD productivity database.

- 노동·자본 등 투입요소의 질적 고도화 : 교육·훈련 등을 통한 인적자원의 고도화는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나타나며, 금융시장의 선진화는 자본비용의 절감을 통하여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제고
- 기존 산업의 구조 고도화 : 주력 제조업 부문의 부가가치 원천의 고도화; 생산·제조의 비교우위 상실을 R&D, 디자인, 마케팅 등 새로운 부문으로 대체, 탈공업화에 대응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
- 신기술에 기반을 둔 새로운 산업의 형성 : ICT, BT, NT 등 신기술의 산업화; 산업형성초기에 있는 이들 부문의 선진국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음. 따라서 성장기회가 전통산업보다 더 큼
- 규제개혁, 개방화 등의 제도 개선은 경쟁 및 혁신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제고

나. 전망

- 전환기 우리경제의 과제는 종래의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시대·환경에 맞는 전략 및 실행방안
 - 정부 개입을 지양하고 기업가정신을 고양하도록 시장기능을 활성화
 - 자본집약적·제조업 중심의 산업발전전략에 이어, 지식기반산업 및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 발전
 - 부품·소재 등 산업연관관계의 기초를 강화하여 완제품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기업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기업간 양극화 극복
 - 기술혁신이 경제성장을 추동하는 선도적 기술개발체제를 구축
 - 특히, BRICs·신진개도국·이슬람권 등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경제체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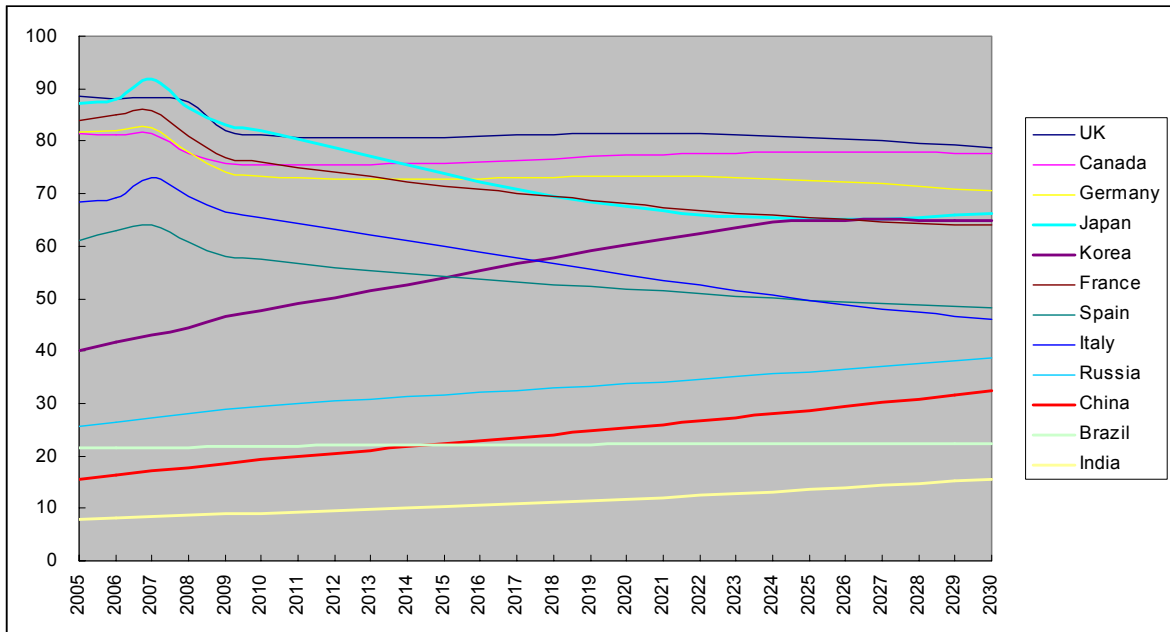
<표 2>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

	종래의 방식	변화 방향	대응 과제
리더십	• 정부 주도, 시장 개입	• 민간 주도, 시장 자율	• 규제개혁, 경쟁촉진 • 시장시스템 정착
산업발전	• 자본집약적, 제조업 중심 • 지역 불균형	• 지식기반형, 제조업·서비스업 융합 • 지역 균형	• 기술혁신 • OEM함정 탈피 • 지역클러스터를 통한 내재적 발전기제 구축
산업구조	• 완제품 중심 • 대·중소기업 양극화	• 부품·소재 부문 강화 • 기업간 네트워크 확대	• 중견기업 육성 • 중소기업 혁신역량 제고
기술전략	• 모방 및 추격 • 대기업 중심, 폐쇄형	• 원천기술·프론티어 연구 확대 • 네트워크 및 개방형	• 기술혁신체제 개선 • 공공연구기능 재정립 • 기술금융 활성화
인적자원	• 기능형 인재 • 대립적 노사관계	• 창조적 인재 • 다양한 근무형태	• 대학교육 개혁 • 평생교육체제 구축
국제분업 구조	• 미·일·유럽 중심, 수직적·산업간 분업	• 다극화된 세계체제, 수평적·산업내 분업	• 글로벌생산네트워크 구축 • 능동적 개방화

- 경제발전 전략의 전환 및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향후 한국경제는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률을 상당기간 지속하여 선진국과의 소득 격차를 줄여나갈 것으로 전망
- 2005년 현재 미국의 40% 수준인 일인당 GDP는 2025년에 65%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05)
 - 우리나라 일인당 GDP는 2015년에 스페인을, 2017년에 이태리를 각각 추월하여, 2025년경에는 일본·프랑스에 버금가는 소득수준에 도달
- 미국은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실현하여 소득격차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
- 러시아, 중국, 브라질, 인도 등 신흥공업국은 2030년까지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선진국과의 소득격차는 현저하게 줄어들 것

[그림 4] 일인당 GDP 장기전망

(미국 = 100)



자료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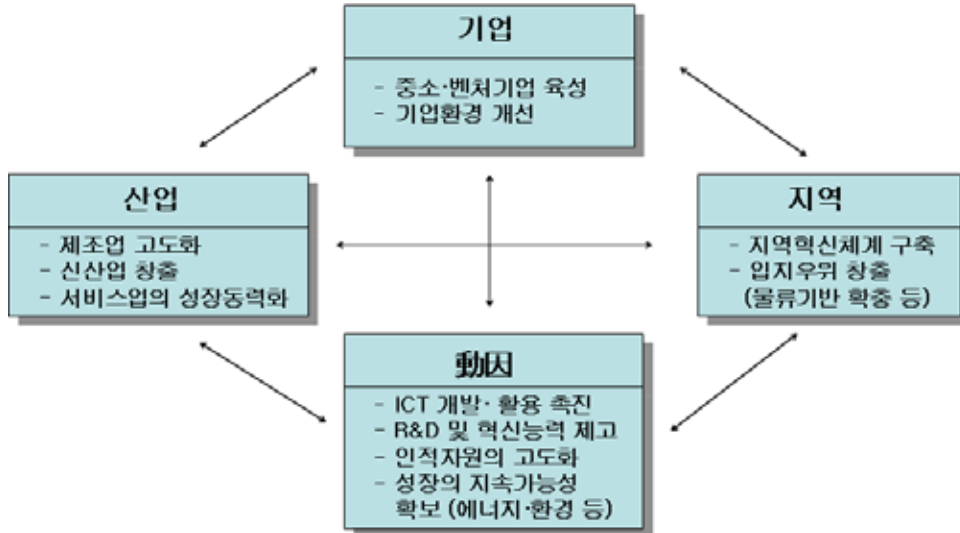
3.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가. 정책방향

-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정책변수를 기업, 산업, 지역 및 動因(enablers) 등 네 가지 측면에서 검토
 - 기업의 창업-성장-퇴출 과정은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핵심. 따라서 기업가정신이 창발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이며, 중소·벤처기업 육성으로 경제의 활력을 유지
 - 산업구조의 진화 및 고도화는 경제발전의 또 다른 측면. 생산성 혁신을 통한 제조업 고도화, 기술발전을 내재화한 신산업 창출, 및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 지역의 입지우위 차이는 경제성장의 차이를 초래. 산학연 연계에 기초한 혁신클러스터 육성 및 물류기반 확충 등을 통하여 입지우위를 창출
 - 노동·자본 등 투입요소의 생산성은 ICT 등 신기술 활용, 혁신능력, 인적자원의 수준 등이 결정. 자본시장은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로 경제성장에 기

여. 에너지 확보, 환경 보전 등은 지속성장의 필요조건

[그림 5] 경제성장 원천 및 주요 정책변수



나. 정책과제

1) 기업

① 기업 환경 개선 등 민간의 창의성 극대화를 위한 시장경제의 정착

- 정부에 의한 직접적 규율에서 시장 자체의 상시적 규율 또는 정부의 시장친화적 규율로 전환
 -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정부의 직접적·일률적 규제에서 중장기적으로 시장친화적인 규제 또는 시장 자체의 규율로 대체
- 정부의 소비자정책 기능의 강화 및 규제개혁의 실효성 제고
 - 시장규율의 정착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압력이 필수적
 -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민간의 이해관계자 참여를 강화

②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여도 제고

- 중소·벤처기업이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 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

- 중소·벤처 기업을 한국에 세계 4대 「부품·소재 글로벌 공급기지」를 구축하는 핵심 축으로 육성
- 선진국형 서비스 중소기업의 육성과 경쟁력강화를 통해 지속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중국경제와 동반성장할 수 있는 산업기반을 확립
- 산학협력을 바탕으로 현장적응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공급할 수 있는 인력양성체계 및 이를 위한 유인체계 구축
-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를 정책금융의 장기수혜기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혁신형기업과 신규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
 - 정책금융 효율성 제고·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목표-성과 관리 강화

2) 산업

① 제조업 고도화 : 글로벌 생산구조의 중심권 진입

- 제조업의 투자활성화 및 투자구조 고도화에 주력
 - 투자활성화에 있어 기존의 설비투자 위주의 투자에서 R&D, HRD, IT, 디자인 브랜드 투자 등 소프트 자원 확충을 위한 투자 확대
- 주력산업과 서비스산업의 산업별 특성에 부합한 경쟁력 확보전략 추진
 - 주력산업의 산업별 특성에 맞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전략 추진
 - 자동차·기계·반도체 등 성장단계 산업은 수요확대가 예상되는 미래형 첨단품목을 중점 개발하여 세계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
 - 성숙단계에 진입한 조선·철강·석유화학산업 등은 나노·IT 등 신기술과의 접목으로 고부가가치화 및 글로벌 경쟁력 우위 지속
 - 바이오·나노기술 등 신기술의 기존산업에의 접목을 통해 미래시장 선점과 성숙단계 주력산업의 신시장 개척 등을 통한 재도약 촉진
- 핵심 부품소재의 글로벌 공급기지화 적극 추진

- 원천기술이 포함된 10대 전략 부품·소재를 집중 개발하고, R&D 전 단계에 걸쳐 대·중소기업 협력 강화
- 신뢰성 평가 및 인증기준 제정 등을 통해 세계적 조달네트워크에 참여

② 신산업 창출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구축

-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 및 제품의 기술경쟁력 확보 및 수출산업화
 - IT·BT·NT 등 신기술 접목을 통하여 기존 제조업의 기능부가·차별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부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및 기술의 사업화에 민간의 참여가 필수
 - 기술수준과 국내역량을 고려한 민·관간 전략적 역할분담
 - 부처간 전략적 역할분담에 따른 범부처적 추진을 강화하고, 기업(특히,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하여 조기 산업화 기반을 확충

③ 한류 등 문화산업 진흥기반 확충

-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잠재력은 “한류”를 통해 입증되고 있으나, 향후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창작역량 강화, 산업 인프라 구축 등 기반확충 필요
 - 한류 본류의 핵심인 문화 콘텐츠의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 전문인력 양성, 투자 환경개선, 유통구조 현대화 및 수출 지원정책이 필요하며, 규제 완화를 통하여 창작 환경을 조성
 - 한류를 바탕으로 한 해외관광객 유치 등 관광산업과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
 - 한류의 지속적 확산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

④ 새로운 성장엔진으로서 서비스산업

- 서비스산업을 新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서비스 등 高생산성 부문으로 서비스산업의 구조를 전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
 - 제조업 등 생산활동과 연관성이 높은 통신, 금융보험, 광고, 사업서비스 등 생산자서비스 업종은 대형화·전문화하여 대외경쟁력을 강화

- 전통 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영세 자영업자 비중이 과다한 유통·개인서비스 부문은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
- 교육, 의료, 사회복지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공공성 논리로 억제하기보다 시장원리 도입, 대외개방 등으로 충족
- 국내 관광서비스 인프라의 질적 확충 및 영화, 드라마 등 문화컨텐츠와 관광의 연계 등을 통해 다양한 여행, 문화서비스 수요에 대처

3) 지역

- 지역의 관점에서 본 우리경제의 도전과제는 혁신주도형 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지역의 입지우위 창출 및 내생적 발전기제 구축
 - 지역의 입지우위는 궁극적으로 지역의 혁신역량이 결정하며, 지역의 혁신역량은 혁신의 시스템적 특성을 구현할 수 있는가가 관건
 - 정부의 정책적 개입은 정부의 개입 없이도 작동할 수 있는 내생적 발전기제의 구축이 궁극적인 목표

① 혁신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지역의 내생적 발전기제 구축

- 현재 초기단계에 있는 혁신클러스터 사업이 내생적 발전기제로 정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으로, ① 수도권·대전 대비 지방의 취약한 혁신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 및 재정 지원은 타당하나, ②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혁신주체인 기업의 역할이 관건이며, ③ 혁신주체 간의 연계를 통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 중앙부처별로 산재한 다양한 사업들을 지역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정비
 - 생산이나 연구기능 등 단순 집적지에서 산학연관 혁신주체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제도·시스템 구축

② 균형 성장 전략을 통한 지역의 발전 잠재력 확충

- 지역 차원에서 성장 동력을 다원화하는 것이 균형 성장 전략의 핵심

- 수도권 일극 집중은 수도권의 질적 성장에 지장을 주는 한편, 지방의 침체를 초래하여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저하
- 지역간 경쟁을 유도하는 지역별 차별화 및 차이의 존재는 필요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과제를 국가적 관점에서 재조명하여 정비
 -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건설 등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투자성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국가적 관점에서 시스템 디자인이 필요

4) 주요 動因

① 혁신주도형 성장을 견인하는 기술개발체제

- 전환기 우리나라 기술개발체제의 당면 과제는 ① 기술개발 저변을 확대하여 경제전체의 혁신역량을 강화, ② 경제발전을 견인하도록 기술개발 내용을 심화, 및 ③ R&D투자의 성장기여도 제고 등 세 가지로 요약
 - 기술개발 저변의 확대 : 소수의 대기업이 주도하는 민간기술개발체제에서 중소·벤처기업의 R&D투자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기술금융을 포함한 기술혁신 유인체제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관건
 - 기술개발 내용의 심화 : 새로운 성장원천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업화연구 → 응용기술연구 → 원천기술연구로 국내산업의 혁신역량을 심화·확충하는 것이 필요
 - 투자효율성 제고 : R&D투자에 있어서 투자효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집중하고, 기술개발 주체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② ICT 개발 및 활용 촉진

- ICT 부문의 향후 과제는 ICT 발전을 가속화하여 ① ICT 산업의 세계적 선도지위의 강화 및 ② 경제전반의 생산성 동인으로서의 역할 제고
 - 현재 추진하고 있는 「IT839 전략」의 성공을 위해 서비스 고도화, 네트워크 확충, 관련기기/부품의 유기적 발전, 상용화 촉진 및 시장 확대 필요

- 신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수요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신규서비스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성 높음
- ICT 산업 내의 업종별, 기업규모별, 수출과 내수부문간의 양극화 완화
- 경제전반에 ICT기술의 접목·확산을 통해 생산성 제고를 유도하고 특히, 고용효과가 큰 SW, 콘텐츠 등 ICT 서비스산업의 육성, ICT기반 직업능력 제고 등을 통해 지속적인 일자리기회 창출

③ 금융기능의 제고

-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국내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나, 향후 발전 잠재력은 큰 것으로 평가
- 금융산업의 장기비전은 동북아 금융허브로서의 위상 정립, 이를 위하여 효율적·안정적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력있는 금융투자처로 육성
 - 경쟁력 있는 금융하부구조 구축 : 포괄적 규율체계(negative system) 및 투자자보호·회계투명성·공시제도 등 시장중심구조로 전환
 - 금융시장 선진화를 통한 시장의 매력도 제고 : 채권시장의 국제화, 기관투자가 역할 제고, 국내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업무 활성화 등
 - 혁신을 통한 금융산업 역량 강화 : 겸업 금융 확대, 금융 리스크 관리·감독 체계 정비, 선도 금융기관 육성, 금융소외 부문 해소, 금융감독 역량 확충 등
 -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 제고,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 확립, 기업규모·신용도 등 기업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기업금융 체제 구축 등

④ 에너지 확보 및 효율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추구

- 우리나라는 총 에너지의 97%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고유가 시대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효율성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 에너지확보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과 자주개발률 제고하고, 효율성

확보를 위해 에너지단위를 지속적으로 낮출 필요

-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충하고 에너지 고효율 산업구조로 전환 추진
- 유전개발펀드 도입 및 유전개발 참여 등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태양·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 기술혁신 등을 통해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 전환, 및 에너지분야 재원 확대

제2장 인적자원 고도화

1. 현황 및 문제점

- 전 세계적으로 안정적 성장과 사회발전을 위한 핵심정책으로서 인적자원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이 지체
 - 정보화 및 세계화로 인한 경제·사회의 심층적 구조 변화는 개인 및 기업에게 끊임없는 전략적 대응능력 및 자기주도 학습·혁신능력을 요구하며, 국가의 안정적 성장과 발전의 관건은 지식과 기술의 원천인 인적자원의 질적 수준에 좌우
 - 우리의 경우, 지식경제사회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인적자원개발 패러다임을 정착하고 국내외 지식·인적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발·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과 제도개혁이 지체
- 우리는 고등교육의 보편화 등 외형적으로는 고급인력의 대량공급 체제를 구축하였으나,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직업현장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미흡
 - 국내 대학 다수가 상호 차별성이 미약한 일반 교육기관 성격이 강하여, 고학력자의 초과공급 및 질적 불일치(skill mismatch)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직종별, 전공별로 인력난 문제가 병존
 - 고급과학기술인력은 물론 제조업 기술인력과 기업지원서비스부문의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지속적인 지식기반화를 저해
- 획일적이고 관료적인 학교교육 체제하에 수월성·다양성 교육이 저해되고 있으며, 사교육의 팽창으로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불평등 정도도 심화
 - 과거 학교교육은 교육기회의 형평적 확대를 통해 사회 전체적인 부와 소득을 평등화한다고 하는(great income equalizer) 社會統合機能을 수행하여 왔으나, 최근 사교육비의 증가로 인해 이러한 기능도 약화
 - 이러한 가운데, 조기유학을 포함한 해외유학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부담도 증가 추세 (우리나라의 인구당 해외 유학생은 세계 1위 [OECD(2004), Internationalization and Trade in Higher Education])

- 근로자 개인이 주도하는 평생학습, 인적자원 투자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평생학습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고, 평생교육 수요를 수용·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도 미흡
 - ‘전업학생 → 전업직장인’이라는 전통적인 교육-근로간의 이분법적 구조가 지배적이며, 재직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과 제도 부재
 -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이 빈약하여 이들의 사회·경제적 이동성이 제약
 - 교육수준 증가 및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여성 및 중고령자의 인력 활용에 대한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여성 및 고령자의 경제활동참여율은 정체 혹은 감소추세에 있음
- 인적자원 관련 정책의 조율기능이 약하며 중앙집권적이고도 폐쇄적인 성격이 강하여 정부사업의 효율성·효과성 저조
 - 교육, 연구개발, 산업, 복지 등 인적자원 관련 정책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각종 정책 및 사업의 부처간 조율·연계가 취약
 - 지식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해외의 선진지식기술자원을 지속적으로 흡수하고 국내 시스템에 접합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나, 아직은 이러한 개방형 인적·지식자원개발체제로의 전환이 미흡
- 우리의 교육투자 구조는 공·사교육 투자 모두에 있어 심각한 비형평적인 요소를 안고 있어 교육양극화 문제가 심각.
 - 정액 부담방식이 대부분인 사부담 공교육비는 정부부담 교육비의 70%인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학자금 지원(장학금, 용자, 소득공제 등)은 미미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조
- 국가차원에서의 관련 의사결정 구조를 볼 때, 정부, 의회, 전문가간, 그리고 정부내 교육담당 부서와 여타 부서간의 체계적인 연계나 협력 고리가 미약
 - 평준화정책, 입시정책, 대학개혁 등 주요 현안 타개를 위한 새로운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지만, 집단간 이해갈등만이 첨예화하여 관련 주요 법안 제·개정이 계속 교착상태에 있는 현실

2. 여건 및 전망

가. 여건

- 우리가 안고 있는 교육·인력개발체제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인력 강국으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잠재력은 충분함
- 교육의 양적공급기반 : 고졸자의 대학입학률이 82%에 달하는 등, 고등교육의 대중화가 완료되어 '교육기회의 확대'에 관한 정책적 부담이 거의 해소. 중등 학생의 학업성취도 또한 세계적인 수준이어서, 교육의 수월성, 다양성에 맞춘 본격적인 '질적 개혁(quality reform)'을 시도할 수 있는 여건
- 인력수요 : 지식기반제조업, 전략적 사업서비스는 물론 아시아시장 수요를 바탕으로 고급 소비재산업이 될 수 있는 경공업(식품가공, 섬유·의류·혁제품 등) 부문도 고급인력 수요를 창출할 가능성
- 정보화 능력 : 하드웨어 인프라와 정보화 기초능력에서 앞서 있어, 네트워크 기반형(Network-based) 교육·학습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입장
- 투자재원 : 교육열이 정규학교 단계에 편중되어 입시경쟁, 과열과외 등 부작용을 낳고 있기는 하지만, 높은 교육열은 상당한 규모의 잠재적 투자재원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있음을 시사
- 노동시장 환경 : 외국기업의 국내진출 증가,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붐 등을 배경으로, 탈학력·학벌주의의 새로운 고용인사 관행이 확산되는 추세
- 새로운 사회적 학습환경 : 정부·민간 차원의 대외교류, 사회의 개방도가 계속 증가하면서 각종 선진 제도·관행이 국내에 파급되고, 개개인의 학습 잠재력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사회적 '학습환경'과 '학습동기'가 조성
- 정책 환경 :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정,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출범 등은 교육-노동-산업-연구개발 등을 연계하여 인적자원 문제를 종합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방향의 시도로 평가

나. 전망

- 이러한 잠재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력 고도화에 관한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우리 교육인력개발체제의 경직성,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
 - 정부주도하에 국내 모든 교육훈련기관의 질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 민간의 공정한 혁신 경쟁을 촉발하고 그 성과가 확산·파급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 및 정책수단 재정비가 핵심 과제
 - 초중등학교에 대한 중앙으로부터의 과격한 제도개혁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으며, 교육자치제도와 지방자치의 연계가 학교제도 다양화, 현장·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달성하기 위한 최대의 관건
 - 대학부문의 개혁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중단기간에 국립대학의 통폐합 및 특수법인화, 사립대학에 대한 규제완화와 지배구조 개선에 있어 상당한 성과가 기대되며, 대학 관련 재정확충과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있어서도 새로운 성과가 기대됨
 - 반면, 재직자 훈련·평생교육 문제는 재정투자는 계속 확대될 것이지만, 관련 제도 및 부처의 중첩성·복잡성 등으로 인해 효과적인 통합서비스가 제공되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며, 부처 및 이해 집단간에 커다란 갈등과 시행착오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이들에 관한 최대의 변수는 현재 교육과 인적자원 총괄기획기능을 맡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임
- 우리나라의 교육·인적자원부문의 미래는 경제 전체 못지않게 매우 유동적
 - 거대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21세기 교육·인적자원 선도국으로의 위상을 굳히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성장, 국가발전 모형을 완성할 수도 있으나,
 - 잠재력 구현에 필수적인 심층적인 제도개혁과 이를 위한 인식의 전환 및 사회적 합의가 계속 지체될 경우, 현재의 침체 상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인력의 '양'과 '질' 문제가 고질화되어 범세계적인 '인재' 경쟁에 낙오
- 기준이 되는 시나리오는 다음의 세 가지를 상정할 수 있으며, 시기적으로 앞으로

7~8년간이 일차적인 고비라고 할 수 있음. 교육·인력부문의 문제와는 별도의 외적 요인(전반적인 경제, 사회적 환경)도 중요

□ **【시나리오 1】** : 전면적인 체제 정비와 인적자원 강국으로의 도약

○ 의사결정과정, 정책추진체계의 문제점 조기 정비 ⇒ 현재의 침체/고착상태 탈피 ⇒ 일관된 방향의 심층적인 제도개혁 추진

▪ 2010년까지 : 부서간의 연대 강화, 교육인적자원발전 종합계획 마련, 주요 법령 개정 및 제도 정비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일부 법제도 정비)

▪ 2020년경까지 : 사회적 합의 형성, 정부내 새로운 의사결정과정 정착, 주요 법·제도 정비 완료, 변화의 성과 가시화(사교육비 문제 둔화 등)

*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편, 대학 구조고도화 종합계획 수립 및 국립대학 개혁, 직업훈련제도의 재구조화, 교육시장 개방 및 글로벌 인력네트워킹 강화, 교육재정확충 등이 주요 전제

▪ 2030년까지 : 제도변화의 완성, 환경변화에 스스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분권적이고 개방적인 시스템 완성, 세계 수준의 고급인력의 동북아 집적지

* 대학교육의 지방화, 사이버교육체제의 완성, 동북아/글로벌 인력네트워킹의 구축, 한반도 정세변화에 따른 교육 충격의 흡수 등이 주요 전제

□ **【시나리오 2】** : 상황적/임의적 대응 => 부분적인 개선, 전반적인 침체

○ 의사결정과정, 정책추진체계의 문제점 지속 ⇒ 고답적인 정책 대응, 이에 따른 혼란, 이해갈등, 개혁지체 현상 지속 (교육·인력문제의 외적 요인 가세) ⇒ 부분적인 개선이 있지만 교육 수요자의 혼란/일탈적 선택 지속 ⇒ 인력의 '양'과 '질' 문제 고착화

□ **【시나리오 3】** : 부분적인 개선, 전반적인 침체 => 반전, 심층적 제도개혁 착수

○ 반전의 계기는 우리 경제·사회의 전반적 위기 상황 속에서 태동할 수 있으며, 반전 및 새로운 제도개혁의 모멘텀은 정부가 아닌 민간부문에서 올 수도 있음

3.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가. 정책방향

- 교육기관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여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하고 교육의 경쟁력 확보
 - 학교간 경쟁을 통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체제를 개편하여 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실용적 교육을 통해 인력수급의 질적 불일치를 해소
- 사회통합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 강화 및 가용인력의 활용 및 극대화
 - 계층간 소득격차, 인적자원투자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양극화와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고 취업능력을 향상
- 중앙정부·지자체·민간의 새로운 공조체계 구축
 - 정규교육은 물론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지자체 및 민간의 참여와 책무를 강화하여 필요 투자재원을 확충하고 투자의 실효성·효율성 제고
 -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중앙부처간 정책기획·조정기능, 각종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집행기능은 지자체로 이양

나. 정책과제

1) 수요자 중심의 교육 강화를 통한 교육의 경쟁력 확보

- 공공성과 수월성·다양성이 조화된 학교교육을 위한 제도개혁 지속 추진
 - 특성화학교, 자율학교, 자립형사학 등을 확대하여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강화하고 학교간 차별화 및 혁신경쟁을 유도
 - 중장기적으로 공립·사립의 2원적 학교제도 정착을 위해 현행 학교제도 및 재정지원체계 정비(자립기반이 취약한 사립학교의 공립화)

- 일제시대이후 유지해온 현행 학제를 개편하여 교육경쟁력 강화(학교급별 수업연한 조정)
- 대학의 전문화·특성화 발전으로 대학교육의 산업현장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학연 연계를 강화하고, 재정지원·규제 유인을 적절히 결합하여 단계적으로 구조개혁 추진
- 국공립·사립, 수도권·지방대, 일반·특수·전문대학을 망라한 국내 고등교육 전체에 대한 장기 발전계획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재정지원 방안 수립하여 일관된 방향의 구조개혁을 추진
- 우선적으로 국립대의 자율책임경영체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안(특별회계제도, 특수법인화 등)을 확정하고, 국립대 예산지원체계 정비(국립대 통폐합 및 입학 정원감축 등)
-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지배구조 개선 조치와 함께 자율권 및 정부지원(세제 및 예산)을 확대하고 M&A 등 시장주도적 구조조정을 위한 법도 정비
- 연구개발 인력, 전문 지식근로자 등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외국대학과의 공동프로그램 활성화, 전문분야 초일류대학원 유치 등 대학시장의 개방·국제화 지속 추진
-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 및 교육 평가시스템을 개선하여 평가결과를 대학진학 및 대학의 질 관리에 활용

2) 사회적 이동성 증진과 사회통합을 위한 저소득층 교육지원제도 정비

- 유·초등학교 등 교육초기단계에서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대폭 강화
- 유·초중등학교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일률적인 학비 보조 확대 방식을 지양하고 바우처제도, 장학금제도,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용자제도 등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 지원을 집중
-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대학교에 대한 직접적인 기관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학생에 대한 간접 지원방식으로 정책을 전환

- 만5세 무상의무교육 추진에서 나아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차원에서 아동의 취학연령을 만5세로 전면 하향조정추진
- 사교육으로 인한 교육·인적자원투자의 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 지속 추진

3) 가용인력의 활용도 및 질적 수준 제고

- 연구개발 인력, 전문 지식근로자 등 고급인력의 지속적인 인적자원 투자
 - 국가경쟁력 강화를 선도하는 유망선도 분야의 인재집중양성(BK21, 산학연 연계강화프로그램 등)
 - BT·NT·IT·CS(인지과학) 등 융합기술에 기초한 두뇌지향형 산업/기술군(brain-oriented technologies)의 핵심 해외인력을 유치하는 동시에 내부 양성기반 구축
 - 지식서비스분야 전문대학원 제도정착 및 각 분야별 교육훈련 프로그램 다양화 등을 통해 특성화된 전문인력 양성
- 여성·중고령자 및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을 강화하여 취업능력 제고 ⇒ 노동의 세대내·세대간 이동성 증진
 - 고용보험제도 및 예산지원 사업을 전면 정비하여 직업훈련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대상별·차별적 접근을 통해 근로계층의 취업능력을 향상
 -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평생교육/직업훈련기능 대폭 강화
 - 해외 교포 등 해외의 가용 고급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전략을 세워 집행하고, 단순 숙련·기능직에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의 활용도 제고
 - 고용유발형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적극적 고용전략 추진
 - 급격한 고령화를 감안하여 능력이 있는 한 평생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근로조건 마련을 위해 정년조정 및 임금피크제 확대
- 청년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차원에서 생애근로기간 확대 및 정예강군 육성, 병역형평성 제고를 위한 군복무제도 개선
 - 국방의무를 포괄적 국가·사회봉사 개념으로 전환하고 국가적 차원의 인력

양성에 기여

4) 중앙정부 · 지자체 · 민간 공조의 교육 · 인력개발체제 구축

- 초·중등교육에 관한 시도교육청과 지방정부간의 역할 분담체제를 정착하고, 지방대학에 대한 광역 지자체의 역할 강화
 - 초·중등 · 대학부문을 막론하고 지역 내 교육투자재원 조달 및 집행에 관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강화
 - 지자체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교육을 주축으로 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특구' 모형을 조기에 도입하고 확산
- 민간투자와 정부투자간의 보완성을 강화하고, 재정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제도 정착
 - 용자, 투자, 보조사업(민간 및 지자체)을 포함하여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성과관리제도 정착을 위해 별도의 재정지원 하에 관련정보 및 평가인프라(D/B, 인력, 제도)를 조속히 정비.
- 지방정부의 정책 역량 제고(capacity building)
 - 중앙과 지방의 공공부문 인력 실태에 대한 기초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인력강화를 위한 전문교육프로그램 확대, 공공부문 인력재배치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
- 교육 인적자원정책 관련 주요 의사결정 및 구조개혁에 관한 새로운 접근방법 모색 · 정착
 - 재정지원 확대와 제도/구조개혁을 병행 추진하고 이를 통합한 청사진 하에 일괄타결(Fast track) 방식의 법령 제 · 개정 방식 고려
 - 교육인적자원부의 초·중등교육 관련 기능과 대학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기능을 분리하여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후자에 집중하고, 전자는 별도의 중앙조직이 지방당국과 적절히 역할을 분담하여 관할
 - 교육과 복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확대

제3장 능동적 국제화

1. 현황 및 문제점

가. 대외개방과 대내개혁의 연계 부족

- 한국은 수출주도형 발전전략을 통해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으나 여전히 폐쇄적 중상주의 사고가 지배
 - 개방의 긍정적인 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시장개방은 외국의 압력에 대한 굴복이라는 수동적 통상관이 주류
- 국내의 기업활동 및 생활여건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미달
 - 대외개방이 적극적으로 대내개혁에 활용되지 않아 정부규제, 행정절차, 노동시장 관행 등 기업활동 여건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미달
 - 우리나라의 '04년도 글로벌화지수는 세계 61개국 중 32위
- 글로벌 생산체제와의 네트워크 구축은 아직 초보단계
 - 우리의 외국인직접투자 누적잔고는 GDP의 8.1%로 중국보다 낮은 수준
 - 서비스수출/상품수출의 비율은 16.3%로 영국 48% 및 미국 4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나. 국제적 위상확보 미흡

- 경제규모는 세계 11위에 도달하였으나 우리는 이에 상응하는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멕시코, 호주, 네덜란드, 브라질 등 GDP 규모가 우리보다 적은 국가에 비해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없는 상황
- 한국에 대한 국가이미지는 세계 중하위권
 - 우리의 국가이미지는 “경제·문화적으로는 활력이 넘치나 국제규범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폐쇄적인 국가”

- 일부 정치·사회분야의 관행 및 제도의 국제 기준 미달 등으로 후진적 국가이미지가 남아 있기 때문
- 우리의 국제적 위상 확보에 필요한 대개도국 ODA 지원도 크게 부족
- 우리는 개도국이 원하는 기술과 경제발전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대개도국 지식협력에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에 걸맞는 국제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다. 전 세계적 지역경제통합 추세에서 소외

- 세계적으로 EU, NAFTA, ASEAN 등 지역주의 추세는 강화되고 있으나 우리는 동북아 및 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경제통합이 지지부진하여 성장 잠재력 확충에 걸림돌로 작용
-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이 지속되고 있고 남북한 경제력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점도 동북아의 제도적 경제통합의 주요한 장애요인
- 한·칠레, 한·싱 FTA는 타결되고 한-아세안 FTA도 조기타결 난망이나 한-일 FTA는 협상이 중단되는 등 경제통합 논의가 지지부진한 실정
- 최근 한·미 FTA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반대의견도 거세게 대두되고 있음
- 전반적인 남북관계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아직 북한이 고립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정전체제가 유지되고 있어 안보불안 문제 상존
- 높은 국방비, 동북아협력에의 장애, 국가신인도 저하 등 분단비용으로 인한 성장 잠재력 훼손
- 남북한 경제력 격차가 더욱 확대되면서 남북한 통일시 한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규모도 커지는 상황

2. 대내외 도전과 향후 전망

가. 세계경제의 통합추세 가속화

- FTA를 중심으로 지역통합이 빠르게 진전
 - 다자간 경제통합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반면 지역 내 FTA는 '05년 8월 현재 총 180개로 급속히 확산 추세이므로 지역통합에 불참하는 비용은 더욱 커질 전망
- BRICs가 세계경제에 편입되면서 세계경제 지형의 큰 변화 초래
 - BRICs는 국제분업 구조에서는 우리 기간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위협요인이거나 시장확대 측면에서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므로 FTA 등 적극적인 개방노력과, BRICs와의 글로벌 네트워크의 강화, 한국제품의 이미지 개선 노력 절실
- 한·미 FTA는 수직적 국제분업체제(Global Vertical Production Network) 구축을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
 - 미-칠레, 미-호주 FTA의 사례를 보면 지식기반서비스 부문의 개방압력이 거세어지고 비관세장벽,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보조금 등에 압력이 가중될 전망이므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존중해야 할 필요성 증대

나. 국제안보환경과 북한의 변화

- 국가중심의 군사안보에서 테러, 질병, 환경, 재난 등 인간 중심의 안보 개념으로 전환되고 안보 위협의 원천도 국가에 그치지 않고 테러리스트, 특정 종족 및 집단, 국제 NGO 등 다원화될 전망변화
 - 대개도국 외교, 다자외교의 중요성 부각
-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세력 균형은 다극화될 전망이며, 다자간 안보기구의 등장은 미지수이므로 새로운 질서 확립 이전에는 역내 불안요인 상존
 - 남북한 간 평화체제 구축이 긴요하며 동북아 경제통합으로 안보질서의 공백을 대체할 필요성 증대
- 북한은 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빠른 속도로 세계경제에 편입될 전망이며 특히 중국이 민주주의화에 성공할 경우 북한의 변화속도는 가속화
 - 남북한 간 소득격차 해소와 이를 위한 남북경제협력의 중요성 부각

다. 시나리오별 대응전략

- 중국의 민주주의가 지체되고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에 따라 일본의 군사력은 강성해지나 동북아지역의 다자간 안보기구의 설치에 실패하여 동북아 안보가 위협받는 경우
 - 동북아의 경제통합을 통해 안보불안시의 비용을 크게 만들 필요성과 대개도국 지원을 통해 우리의 외교력을 강화할 필요성 증대
- WTO, DDA 등 다자간 경제통합은 지연되고 FTA에 대한 내부 저항을 극복하지 못하여 국제적 무역협정 추세에서 소외되는 경우
 - 신규 대규모 시장은 물론 기존의 수출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가 초래될 것이므로 내부의 갈등조정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 증대
- 제조업의 공동화, 고용 없는 성장 등 양극화가 심화되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경제의 불안정이 고조되는 후유증을 겪게 될 경우
 - 적극적인 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이의 고통을 완화하는 보완 대책 수립 필요
- 북한이 체제전환 과정에서 내부통제력이 상실되는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대규모의 난민이 중국 국경, 휴전선 등을 넘는 상황
 - 남북통일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고 우리에게 많은 혼란과 비용만을 지불하게 한 채 親중국 정권을 탄생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남북경협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우리의 레버리지를 유지할 필요성 증대

3.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가. 비전과 정책방향

- 비전: 국제사회에서 존경 받는 열린 국가 / (열린 소프트웨어 강국)
 - 열린 경제를 이루어 국제규범에 맞는 제도·관행을 가지고 있고
 - 국제사회와 경제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성장잠재력의 확보와 함께 한반도

의 안보적 중요성을 강화하고

-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일정한 책임을 다하며 국제적으로 소프트 파워 (soft power)를 인정받는 국가

□ 국제화 부문의 비전은 한국의 국가비전을 달성하는 데에 긴요

- 열린 국가 구현은 우리의 해외시장 확대의 수단이자 경쟁력 제고수단
- 지역 내 경제협력을 활성화 하는 것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남북한 및 동북아의 외교·안보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긴요
-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것은 한국경제의 경쟁력 제고수단인 동시에 한국의 외교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수단으로서 안보에도 기여

나. 정책과제

1) 국가이미지 제고

□ 국가 정체성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이미지제고활동 지원을 위해 한국의 대표 브랜드 이미지 구축

- 한국의 국가이미지는 분단, 시위 등 부정적 이미지와 경제발전, 월드컵과 같은 긍정적 이미지가 혼재
 - 따라서 문화적 이미지 요소를 활용해 국가이미지 제고 필요

□ 국가이미지의 체계적 관리

- 국내 대표 상징물을 선정하여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시각적, 언어적 상징체계 마련
 - 긍정적 이미지(경제성과, 월드컵, IT발전)를 최대한 활용해,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분단, 전쟁, 시위, 정치낙후) 대비 상쇄 효과

□ 국가이미지 관리체계 조정 및 개편

- 2007년 까지 정부조직 내 의사결정의 조정 메커니즘이 구성되고 동시에 관련 조직간 네트워크 조직화 추진

- 정부의 역할을 주도자에서 조정자로 전환하고, 국가이미지제고 추진체도 관 주도체제에서 민관협력체제로 전환해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 국가이미지 형성경로를 통한 문화이미지 제고

- 해외 한국학 지원 강화, 한국학 지원사업의 거점별 네트워크화, 해외 한국어 보급 확대 등 관계적 통로를 통한 이미지 제고
- 한국관련 문헌의 외국어 번역사업 강화, 해외미디어의 왜곡된 한국이미지교정, 온라인을 매체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활동 강화
- 우수 문화상품 발굴·전파, 한국문화상징물의 설치 확대, 외국인의 한국 체험기회 확대 등 개인적 경험의 통로를 통한 이미지제고

2) 국제협력 강화

□ ODA 및 개도국 지원 확대

- 선발개도국이라는 입지를 활용하고 우리의 소중한 개발경험을 다른 후발개도국에 전수함으로써 한국형 국제협력모델 개발
- 2007년까지 우리의 비교우위 분야를 활용한 한국형 국제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이에 기초한 세부지원 전략 수립

□ ODA의 양적확대 및 질적 제고

- ODA 양적확대: 국내 재정소요 등을 고려하여 단기간 내 선진국 수준으로 ODA를 급격히 확대하기보다는 MDG 달성 마지막 연도인 2015년까지 0.25%, 2030년까지는 UN에서 권고하는 0.7%까지 확대하는 ODA 중·장기 확대 계획 수립
- ODA 질적 제고: 현재의 우리의 국내외 현황을 고려하여 ODA 배분구조상 양자간 무상원조비율을 2030년까지는 OECD/DAC 회원국의 평균인 90%까지 높임

□ 선진원조정책 실시

- 원조대상국 선별기준 마련 및 국가별 지원전략 수립,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정책수립 및 집행도모, 핵심기능 강화 및 원조기법의 선진화, 연구조사·평

가기능의 강화, 사업 수단의 질적 개선, ODA 전문가 양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DAC 가입

□ 참여형 국제협력실시

-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ODA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적 참여와 지지기반 확대
- 개발 NGO, 시민단체, 학계, 경제단체 대표로 구성된 가칭 “대외원조정책위원회”를 설립하여 정부와 NGO간의 대화채널 구축
- 지자체가 ODA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중앙정부, 지자체 및 NGO 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강화
- 민간기업과의 ODA 네트워크를 마련하여 동 기업들이 ODA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국제기구와의 협력강화

- 국제기구 지원성과 평가네트워크를 활용한 다자간 기구 지원전략 수립
- UN의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기초하여 국제기금에의 지원을 강화하고, 이때 우리의 기업들이나 시민단체 참여 유도
 - 국제개발기구에의 지원은 OECD회원국의 평균인 전체 ODA 중 30%를 유지

3) 동북아 경제협력 추진

□ 지역주의는 범세계화와 함께 1990년대에 세계경제의 양대 조류로 등장하였으며 21세기 초에도 지역주의는 확대·심화될 전망

- 「동북아 경제협력체」 설립은 시장 확대와 경제효율성 증대와 같은 경제편익의 실현과 역내 정치·안보적 긴장관계의 해소를 위해서도 필요

□ 동북아 경제통합의 기반조성

- 에너지, 환경, 수송 등의 분야에서 참여국들이 실익을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공동사업 추진 필요

- 동북아 경제통합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 필요
- 에너지, 환경, 수송 등 부문별로 정부부처 혹은 산·관·학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 지역무역협정의 체결
 - 한·미 FTA 체결: 동북아 차원에서의 무역블럭 형성이라는 미국을 비롯한 역외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한국이 한·미 FTA를 비롯한 역외 주요국들과 FTA 추진
 - '07년 3월까지 한·미 FTA 체결 추진 → 선진통상국가 기반 마련
 - 농업 및 서비스산업 등 일부 피해부문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 및 산업구조 조정 촉진
 - 동북아 국가 간 FTA 체결: 한·일, 한·중, 한·중·일 FTA
 - 동북아 차원에서의 FTA는 동북아 주요국인 한·중·일 3국간 FTA가 바람직하나, 일·중간의 관계를 감안할 때 차선택으로 한·일 FTA와 한·중 FTA를 추진
- 동북아 제도적 경제통합의 확대·심화
 - 동북아 경제통합을 위해 국가 간 FTA를 점차 관세동맹으로 심화·발전시키고 무역·투자에서 금융협력 등으로의 확대 도모
- 독립적 경제협력기구의 설립
 - 에너지, 환경, 수송 등 부문별 협력을 위한 협력기구
 - 대북한 지원을 위한 협력기구
- 동북아 경제협력기구 설립
 - 동북아에서 EU 집행위원회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를 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OECD와 같은 경제협력기구 설립
 - 각국의 대표가 참여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해 논의하는 한편 상설 사무국

및 연구기관 설치도 장기적으로 검토 가능

4) 남북한 공동번영의 실현

-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남북한 경제력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전제조건
 - 통일 한국이 동북아의 경제중심국가가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통일비용의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
- 통일 인프라 구축
 -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임금수준, 노무관리, 통관절차 등 북한의 투자조건이 중국을 앞설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북한의 시장적 가치 제고
 - 남북교역과 대북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
 - 남북 협력기금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등 남북경협을 점진적 확대
 - 남북한 주민 「동등대우비용」과 북한의 「시스템전환 비용」 완화를 위해 남북경협의 단계별 지원 다양화 추진
 -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부문의 협력 확대
 - SOC 부문의 남북협력 확대과 광공업 부문의 실질적 협력 강화
- 국제협력을 통한 북한경제개발지원
 - 2012년까지 북한이 IMF, IBRD, ADB 등 국제금융 기구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
 - 대북지원을 위한 다자간 국제협력 기구를 창설
 - 핵문제의 진전에 따라 다자간 국제협력체인 가칭, 국제북한개발협력단 (International N. Korea Development Cooperation Group) 설립
 - 북한경제개발 과정의 부작용에 대비한 국제공조체계 구축
- 통일대비 재원확보
 - 국제협력을 통한 재원조달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며 국내적으로도 세

원의 발굴 및 확충, 불급한 예산지출 축소를 통해 재원조달 능력을 확대

○ 통일 대비연구의 강화

- 통일재원의 소요 분야 및 그 규모, 남북한 시장과 제도의 통합을 위한 연구 역량 강화

5) 제도 및 관행의 국제화

□ WTO와 같은 규범중심의 다자체제(rule-based multilateral trading system)가 확대·강화되고 자유무역협정(FTAs)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가 확대되는 등 세계경제의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의 도입 필요성 증대

- 글로벌 스탠더드의 도입은 우리 제도의 선진화는 물론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증가시켜 경제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4대 핵심 분야에 대한 제도 및 관행의 국제화

- 노동 부문에서는 노사관계법과 제도를 선진화 하고, 외국인력 관리체계 개선
-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개별 금융 산업간 장벽을 낮추어 산업간 통합을 촉진하고 통합금융법 제정을 통한 금융규제와 제도의 선진화 추구
-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고유의 경쟁정책 분야와 이와 연계된 소비자보호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 시장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능동적 시장경쟁문화의 확산과 시장참여자의 자율규제 확대, 경쟁정책과 연계된 소비자보호기능 강화에 정책 초점
-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글로벌 스탠더드 도입에 따라 외환제도 자유화조치를 대부분 마무리하였으나, 2002년 4월 발표된 중장기 발전방안에 따라 외환자유화 추진
 - 동북아 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외환제도 정비와 자본거래 허가제 관련 세부추진일정 마련

□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른 능동적 세계시장 참여

- UR 10년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바탕으로 개방화시대에 부합하는 농정패러

다임을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농업·농촌정책을 시행

- 농업 관련 시장의 기능과 정부 역할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정책부문별 시장기능 강화
- 선진국 수준에 맞는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국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서비스시장 개방과 경쟁을 도입하여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증진 도모
- 단기적으로 방송·광고·법률 등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정책초점을 모으고, 중장기적으로 교육·의료 등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

□ 외국문화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 조성

-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기 위한 환경으로서 외국인의 경영 및 생활환경의 개선이 중요한데, 가장 기본적인 정책은 언어소통이므로 외국어 교육 강화는 FDI 뿐만 아니라 외국문화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
- 아리랑TV와 같은 형태의 라디오 영어 채널 신설, 우수 외국 프로그램의 원어 TV방영 확대, 지상파 DMB 영어방송 실시 등을 통해 외국어 전용 미디어를 확충
- 영어로만 하는 영어전용수업, 영어체험 캠프,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한 심화 연수 운용 등 외국어 교육에 대한 지원
- 외국문화 소개 프로그램 개발·육성, 각종 해외연수 기회의 확대,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 외국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 조성

6) 글로벌 네트워킹 촉진

□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는 지식 및 정보 등 서비스 링크 비용을 축소

- 글로벌 네트워킹을 통해 수송, 통신, 정보수집 등의 비용이 줄어들어 상품 및 서비스 수출시장 개척, 통상마찰 완화, 해외자원 확보 가능
- 글로벌 네트워킹은 시장경제 정착과 이문화 수용에 기여

□ 단순 공산품 수출중심의 지원체제를 탈피하고 기업의 다양한 해외진출을 지원

- 서비스 수출을 확대하여 장기적으로 상품수출 대비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

- 우리 기업의 글로벌화를 장려하여 해외생산체제 구축 및 거점 확보 지원
 - 다국적기업의 육성을 통해 국민 경제의 발전을 도모
- 한국경제의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분야의 투자 유치
 - 한반도를 중국과 일본을 아우르는 동북아의 관문(Gateway)으로 육성
 -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위치하여 물류 및 서비스 중개지역으로서 잠재력 충분
 - 중국의 부상에 대응한 핵심부품 및 소재산업, 서비스경제화를 위한 다국적 기업본사 및 R&D 센터 유치
 - 중장기적으로 총고정자본형성의 10% 이상을 외국인직접투자로 충당
 - 2012년까지 외국인직접투자 년 300억 달러 이상 유치(2004년 순수입 기준으로 76.9억달러, 신고액 128억불)
- 지식기반 경제 구축을 위한 인력의 글로벌 네트워킹을 구축
 - 기술과 지식의 혁신을 위한 해외고급인력의 고용을 증진하고 우리인력의 해외활동도 촉진
 - 국내외 인력간의 지적충돌을 통해 국내 지식시스템의 질적 제고를 도모
 - 2012년까지 정규대학(2년제 포함)에 5만 명 이상의 유학생 유치
 - 우리의 자산인 해외교포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국내경제와 연계
- 문화 및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경제의 고부가가치화 및 다각화를 통해 안정 성장 유도
 - 관광 및 문화산업의 글로벌화는 제조업의존도를 줄이고 고용창출력 제고
 - 관광수입을 2012년까지 GDP의 7~8%로 확대
 - 국제회의 산업을 육성하여 지방의 국제화를 추진

[토론] 혁신주도형 경제를 위한 전략과 과제

송영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현재 우리사회는 저출산·고령화의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고 총인구는 2020년(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 우리나라 2005년 출산율은 1.0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미국의 2.04명, 일본의 1.29명, OECD 평균 1.6('03)명에 미치지 못함.
 - 또한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노인인구비율 7%)에 진입하였으며,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6년에 초고령사회(노인인구비율 20%), 2050년에는 세계 최고령 국가(노인인구비율 37.3%)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3만불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수에 의존하기보다는 수출확대를 지속적으로 추구하여야 함.
- 서비스산업 육성은 기본적으로 수출확대에 가능성을 두고 추구하여야 함.
 - 서비스산업이 수출 확대에 기여할 부분은 자체적 수출확대도 있지만 제조업의 생산성을 높여 제조업 수출확대에 기여할 수도 있음.
- 한국 서비스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직접 수출이 가능한 부분은 금융, 통신, 운수, 건설, 문화서비스 등임.
 - * 한국의 서비스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현재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GDP 기준으로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9.5%),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7.5%), 운수·창고 및 통신업(6.6%), 건설업(6.4%), 금융보험업(6.0%)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0~2005년 동안의 서비스 업종별 성장률은 운수·창고 및 통신업(9.3%), 전기·가스·수도업(7.9%), 금융보험업(7.4%)이 높은 수준을 나타냄.

<표 1> 한국의 서비스산업 총산출 현황

(단위: 조원,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연평균 증가율
서비스업 ¹⁾	335.7 (58.0)	352.6 (58.7)	377.9 (58.8)	387.5 (58.5)	395.7 (57.0)	407.0 (56.4)	4.2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13.2 (2.3)	14.2 (2.3)	15.3 (2.2)	16.0 (2.2)	17.0 (2.2)	18.4 (2.3)	7.9
건설업	42.9 (7.4)	45.3 (7.3)	46.5 (6.8)	50.5 (7.0)	51.5 (6.6)	51.5 (6.4)	4.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5.6 (9.6)	58.1 (9.3)	61.3 (9.0)	59.6 (8.2)	59.5 (7.6)	60.8 (7.5)	1.9
운수창고 및 통신업	36.1 (6.2)	41.5 (6.7)	45.3 (6.6)	47.5 (6.6)	50.8 (6.5)	52.9 (6.6)	9.3
금융보험업	35.3 (6.1)	38.2 (6.1)	46.6 (6.8)	46.9 (6.5)	46.2 (5.9)	48.3 (6.0)	7.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68.1 (11.8)	68.4 (11.0)	71.7 (10.5)	73.2 (10.1)	74.7 (9.6)	76.6 (9.5)	2.5
공공행정 및 국방	29.1 (5.0)	29.6 (4.8)	30.3 (4.4)	31.2 (4.3)	31.8 (4.1)	32.7 (4.0)	2.5
교육서비스업	25.7 (4.4)	26.9 (4.3)	28.1 (4.1)	29.2 (4.0)	29.8 (3.8)	30.1 (3.7)	3.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2.6 (2.2)	12.0 (1.9)	12.7 (1.8)	13.3 (1.8)	14.0 (1.8)	14.8 (1.8)	3.5
기타 서비스업	17.2 (3.0)	18.3 (2.9)	19.9 (2.9)	20.2 (2.8)	20.4 (2.6)	20.9 (2.6)	4.3

주: 1) 서비스업에 전기·가스 및 수도 사업, 건설업 포함.

2) 괄호 안의 값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실질 기준).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SS)

-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분야는 자영업자 비중이 매우 높고 영세하고 주로 단기 일자리 중심의 생계형 창·취업에 편중되고,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운수·창고 및 통신업의 경우 최근 휴대전화서비스 및 인터넷 서비스의 보급 확대와 택배 및 물류업의 발달 등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9.3%에 달했으며, 금융보험업의 경우 금융시장개방이 이루어지면서 외국인 투자의 증가, 신상품 개발 등으로 점진적인 확대가 이루어졌음.

<표 2> 대세계 서비스무역 추이

(단위 : 백만불)

구 분	2001			2002			2003			2004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1. 운수	13,180.2	11,042.7	2,137.5	13,125.5	11,301.0	1,914.5	17,179.8	13,613.0	3,566.8	22,529.4	17,654.8	4,874.6
2. 여행	6,384.0	7,617.0	-1,233.0	5,935.7	10,464.5	-4,528.8	5,358.2	10,102.8	-4,744.6	6,069.0	12,350.2	-6,281.2
- 일반여행	6,373.2	6,547.0	-173.8	5,918.8	9,037.9	-3,119.1	5,343.4	8,248.1	-2,904.7	6,053.1	9,856.4	-3,803.3
- 유학연수	10.8	1,070.0	-1,059.2	16.9	1,426.6	-1,409.7	14.8	1,854.7	-1,839.9	15.9	2,493.8	-2,477.9
3. 통신	397.5	741.8	-344.3	377.7	685.3	-307.6	341.2	692.9	-351.7	445.6	635.7	-190.1
4. 건설	81.7	15.1	66.6	39.3	23.6	15.7	37.2	13.7	23.5	99.2	3.6	95.6
5. 보험	60.1	373.9	-313.8	36.9	570.6	-533.7	34.0	390.3	-356.3	138.7	461.2	-322.5
6. 금융	532.7	82.9	449.8	694.9	69.5	625.4	698.5	101.1	597.4	1,083.1	126.5	956.6
7. 컴퓨터,정보	16.1	103.6	-87.5	19.5	124.3	-104.8	29.7	133.7	-104.0	25.3	156.8	-131.5
8. 특허권사용료	923.5	3,052.9	-2,129.4	835.3	3,002.2	-2,166.9	1,311.2	3,570.0	-2,258.8	1,861.1	4,445.9	-2,584.8
9. 사업	6,388.4	9,237.1	-2,848.7	6,005.5	9,607.3	-3,601.8	6,687.3	11,049.4	-4,362.1	8,125.1	13,162.5	-5,037.4
- 무역관련	884.0	672.8	211.2	772.8	1,430.1	-657.3	1,087.5	1,933.1	-845.6	1,601.5	3,116.9	-1,515.4
- 운용리스	93.3	1,086.2	-992.9	119.1	1,192.3	-1,073.2	184.3	1,055.2	-870.9	264.2	946.7	-682.5
- 기타사업관련	5,411.1	7,478.1	-2,067.0	5,113.6	6,984.9	-1,871.3	5,415.5	8,061.1	-2,645.6	6,259.4	9,098.9	-2,839.5
10. 개인문화오락	138.3	206.2	-67.9	184.8	283.3	-98.5	76.2	261.3	-185.1	128.0	376.1	-248.1
11. 정부	952.4	453.8	498.6	1,042.6	453.6	589.0	1,203.2	452.5	750.7	1,377.0	554.3	822.7
서비스 합계	41,827.3	32,927.0	-6,053	28,387.7	36,585.2	-8,197.5	32,956.5	40,380.7	-7,424.2	41,881.5	49,927.6	-8,046.1

출 처 : 한국은행

□ 문화프로그램 무역에 있어 비교우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문화프로그램 질과 가격의 상대적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는 결국 프로그램이 담고 있는 콘텐츠와 제작기술의 경쟁력에 의해 결정이 되며, 또한 국내시장의 성숙도도 중요함.

○ 프로그램 질의 경쟁력은 프로그램이 담고 있는 콘텐츠와 제작기술의 경쟁력에 의해 결정이 됨.

- 콘텐츠는 결국 문화를 의미하므로 콘텐츠의 경쟁력은 자국 문화의 보편성, 즉 콘텐츠에 담긴 자국 문화가 해외 소비자에게 얼마나 매력적으로 다가가는가에 의해 결정이 됨.

- 프로그램 제작기술의 경쟁력은 자국의 기술수준에 의해 결정이 됨.
- 프로그램 가격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낮은 생산비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이는 다수의 수요를 유발하는 콘텐츠와 제작기술의 경쟁력, 그리고 효율적인 유통구조에 의해 결정됨.
- 프로그램 제작은 고정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재생산 비용이 미미한 전형적인 IRC(Increasing Return to Scale)의 구조를 내재하고 있으므로 프로그램의 수요가 증가할수록 평균 생산비는 감소하게 됨.
- 효율적인 유통구조는 프로그램 유통마진을 줄여 프로그램 가격 경쟁력을 높임.
-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프로그램이 많이 제작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1차 수요지인 국내시장의 규모가 충분히 조성되어야 함.
- 프로그램 제작은 고정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문화의 친숙성 등으로 실패 위험도가 해외보다 낮은 국내시장이 충분히 성숙이 되어야 제작이 활발할 수 있음.
- 문화서비스의 경우 결국 경쟁력은 콘텐츠에서 나오므로 향후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창작역량 강화, 산업 인프라 구축 등 문화 콘텐츠의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기반확충 필요.
- 주5일제 시행 확대에 의한 여가시간의 확대, 관광 욕구의 확대에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콘텐츠 개발.
- 창작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해외 콘텐츠의 적극 유입도 필요함.
- 또한 정부차원의 적극적 해외홍보가 필요함.

<표 3> 연도별 방송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단위: 천불, %)

구 분		지상파방송사		케이블TV·독립제작사 등		합 계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수 출	'98	7,756	11.3	2,261	67.4	10,017	20.4
	'99	10,836	39.7	1,900	△16.0	12,736	27.1
	'00	11,664	7.6	1,447	△23.8	13,111	2.9
	'01	17,147	47.0	1,773	22.5	18,920	44.3
	'02	26,187	52.7	2,626	48.1	28,813	52.3
	'03	36,889	40.9	5,246	99.8	42,135	46.2
	'04	63,638	72.5	7,823	49.1	71,461	69.6
	'05	113,736	78.7	9,757	24.7	123,493	72.8
	총계	287,853		32,833		320,686	
수 입	'98	15,386	△60.4	11,650	△36.6	27,036	△52.8
	'99	20,094	30.6	8,639	△25.8	28,733	6.2
	'00	26,743	33	2,350	△72.8	29,093	1.3
	'01	18,032	△32.5	2,410	2.6	20,442	△29.7
	'02	18,768	4.1	6,343	163.2	25,111	22.8
	'03	18,344	△2.3	9,718	53.2	28,062	11.8
	'04	14,298	△22.1	16,798	72.9	31,096	10.8
	'05	12,657	△11.5	24,318	44.8	36,975	18.9
	총계	144,322		82,226		226,548	

출 처 : 문화관광부 2006

<표 4> 장르별 방송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2005)

(단위: 천불)

구 분	총 계				지상파방송사				케이블·위성·독립제작사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총 계	110,428 (25,394)	100%	36,975 (13,445)	100%	102,626 (21,625)	100%	12,657 (1,729)	100%	7,802 (3,769)	100%	24,318 (11,716)	100%
드라마	101,620 (20,651)	92.0%	3,022 (1,627)	8.2%	98,777 (20,243)	96.2%	1,011 (303)	8.0%	2,843 (408)	36.7%	2,011 (1,324)	8.3%
다 큐	354 (215)	0.3%	3,054 (2,046)	8.3%	185 (68)	0.2%	1,778 (625)	14.0%	169 (147)	2.2%	1,276 (1,421)	5.2%
애니 메이션	2,937 (1,761)	2.7%	5,623 (4,483)	15.2%	71 (326)	0.1%	520.5 (520)	4.1%	2,866 (1,435)	36.7%	5,103 (3,963)	21.0%
영 화	-	-	17,161 (2,168)	46.4%	-	-	9,195 (167)	72.6%	-	-	7,966 (2,001)	32.8%
오 락	2,346 (1,544)	2.1%	1,969 (1,806)	5.3%	637 (230)	0.6%	58.6 (16)	0.5%	1,709 (1,314)	21.9%	1,910 (1,790)	7.9%
음 악	-	-	33 (16)	0.1%	-	-	33 (16)	0.3%	-	-	-	-
기 타	3,170 (1,223)	2.9%	6,113 (1,299)	16.5%	2,956 (758)	2.8%	61 (82)	0.5%	215 (465)	2.7%	6,052 (1,217)	42.9%

주 : 해외교포방송 및 비디오판매분(지상파 11,110천\$, 케이블TV·독립제작사 1,955천\$) 제외/() 안은 편수

출 처 : 문화관광부 2006

- 또한 제조업 등 생산활동과 연관성이 높은 통신, 금융보험, 광고, 사업서비스 등 생산자서비스 업종이 대형화·전문화할 수 있으려면 수요 진작이 필요함.
- 이들 업종의 생산성 향상은 결국 제조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관련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임.

[토론] 혁신주도형 경제를 위한 전략과 과제

김갑수 (산업기술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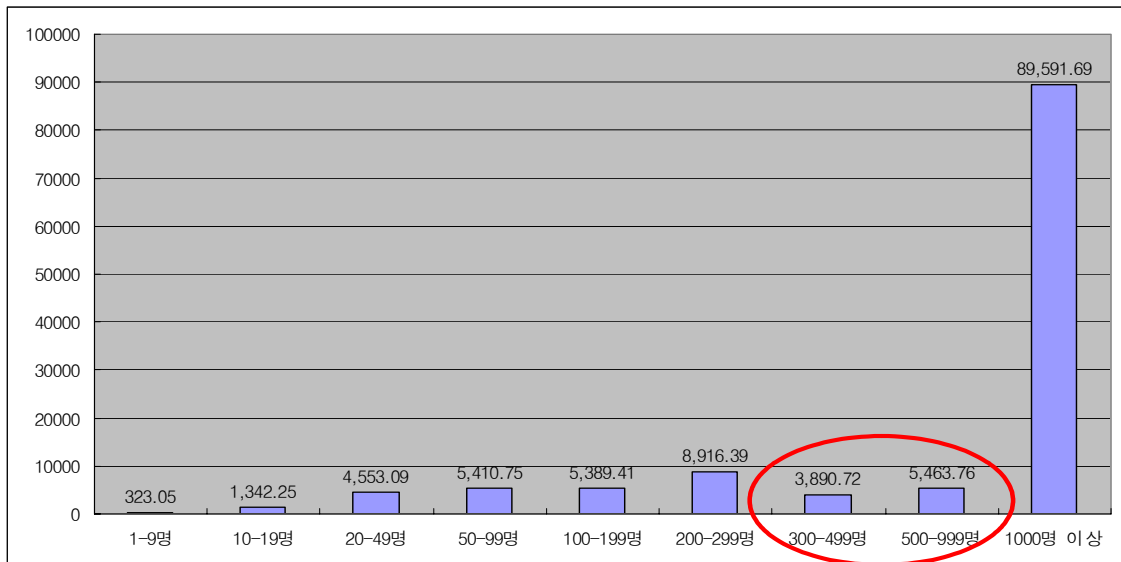
1. 2030비전을 작성하게 된 추진배경에 대한 인식, 즉 더 늦기 전에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장기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자는 취지에 적극 동감.
 -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지닌 도요타도 도요타를 부술 곳은 도요타뿐이라고 하면서 항상 현실과 미래를 다시 생각하여 심혈을 기울인 개선책을 쉬지 않고 강구한다.
 - 2030계획도 마찬가지로 보면 된다. 앞으로 몇 번의 수정을 받아야 한다는 각오 속에서 오늘의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다.
2. 본인의 코멘트는 주로 성장동력 확충과 R&D 투자 확대 분야에 한정하고자 한다.
3. 먼저, 성장동력 확충 부분의 내용은 틀린 데가 없다고 본다. 특히 선도대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선진외국기업이 성장견인축이라는 인식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며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R&D투자(정부+민간) 규모를 현재의 GDP대비 2.85% 수준에서 2030년까지 5.3%까지 올려야 한다는 목표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미래 한국은 생산대국에서 연구개발대국으로 전환해 가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4. 그런데 정책대상에 관해서는 약간의 이견과 추가를 제시하고 싶다.
5. 먼저, 그동안 성장동력의 역량을 키워오고 있는 현실 추이를 세밀히 분석하여 볼 때, 우리 산업은 중견기업이 가장 취약한 “호로병” 현상이 있으며 이를 봐 둔 채 미래 성장동력을 강하게 가져 갈 수 있는지는 의문이 많다.

- 종업원 규모로 300-1000명 이내의 중견기업은 기업수도 적으며 이들의 총 R&D투자 역시 가장 적은 층으로 남아있다.
- 이들 기업은 정책분류상으로는 대기업.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에 속한다.

[참고] 김갑수 기술경영경제학회 2006년 발표논문 (“혁신형 기업의 R&D투자 행태 분석”)

- 그리고 종업원수에 따른 혁신형 기업의 연구개발비 분포를 보면, 우리나라 산업구조에 양극화 현상이 크게 존재하는 것이 파악된다. 그리고 그 구조의 특징은 중견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매우 취약한 “호로병” 모양을 보이고 있으며, 종업원 1000명 이상 기업들의 연구개발비 투자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 전체적으로 보면, 종업원수가 증가하면서 연구개발비를 많이 투자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종업원수가 300명 규모를 넘으면서 연구개발비 총투자액이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종업원수에 따른 혁신형 기업의 연구개발 총투자액 : 2003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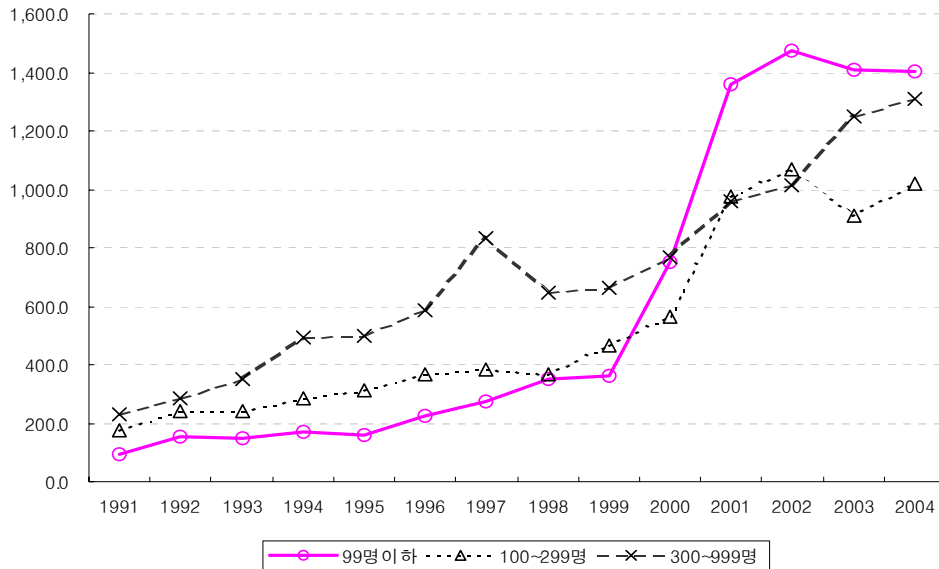
작성 : 산업기술재단 기술정책연구센터, (주)한국신용평가의 정보DB를 재집계.

5. 본 2030비전에서 성장동력의 견인축으로 보고 있는 선도대기업도 종업원 1천 명 이상의 대기업군에서 성장동력 축적을 위한 R&D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은 얼마나 되는지 이 정도로 가능한지 논의가 필요하다.
 - 연구개발비 투자 상위 3개업체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포함), LG전자의 연구개발비만 조 단위를 넘는 대규모로 나타날 뿐, 나머지 매출액 상위 50대 기업에 속하는 거의 모든 대기업들은 많아야 2~3천억대 수준이며 수백억대 수준에 불과한 경우도 많다.
 - 이런 정도의 투자 수준은 일본기업에서는 좀 큰 중소중견기업에서 투자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6. 다시 말하면, “대기업 안에서 보이는 R&D 양극화 현상” 즉 3개 글로벌 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 R&D투자가 획기적으로 증대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미래 한국이 바라는 바의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 현재 산자부는 부품소재 중핵기업 300개 육성론을 주창하고 이를 R&D지원 정책에 반영해 가고 있는데,
 - 대형복합모듈화가 강하게 진행되는 부품소재산업에서는 기술종합력이 필요하므로 중핵기업은 대부분 대기업이 맡아야 납품세계의 세계적 경쟁에 대응할 수 있다. 적어도 대기업으로 키워야 가능하다.
7. 그래서 비전 2030에서 적어도 성장동력의 산업부문에 한해서는 지금까지의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론과 아울러 앞으로는 대기업의 R&D투자를 촉구하는 “중견기업육성론”이 고르게 제기되기를 바란다.
8. 비전2030에서 FDI의 GDP 비중을 5%에서 20%까지 올리자는 주장은 이들 중핵기업이 육성되어 가는 과정과 연동시켜 조심스럽게 조절해 가야 할 필요가 있다.
 - 이미 한국산업은 부품소재의 납품관계에서 외국기업(외국인투자기업 포함)의 선점 내지 독과점이 매우 높아 한국 부품소재기업들이 주변적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 이들 외국기업들의 비중을 너무 빠르게 올리면 경쟁격화로 정책지원 효과가 축소될 가능성 있다
9. 마지막으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론에 관해서 이것이 절실하다는 논지와 함께 비전2030에서 보이는 몇 가지 오류를 지적하고 아울러 새로운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 먼저, 혁신형 중소기업이라고 발표하는 매년 수치는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중소기업의 R&D투자액과 산업내 비중은 2000년 이후부터 정체 내지 하락 상태에 있다. 즉, 성장역량이 안 크고 있는 것이다.
 - 특히 종업원 100인 이하의 중소기업(벤처기업들이 많이 들어 있음)의 정체 현상이 두드러진다.
 - 혁신역량이 이런 상태에서 향후 10년 동안에 혁신형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 가는 견인차로 올라 설 것으로 예측하는 것은 무리가 간다. 비전 2030에서도 문제인식은 같이 하고 있는데 좀더 강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10. 그런데 정책목표의 수치 제시에 조심이 필요하다.
-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 숫자를 2030년에 9만개로 제시하는데, 목표치 산출 근거로 전산업 중소기업수의 3%로 하고 있다.
 - 그런데 지금까지는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여 30만개 중소기업의 10%(선진국 수준)인 3만개를 정책목표로 내세웠는데 비전 2030에서는 이를 바꾸어 전산업분야 사업체수 300만개를 기준으로 바꾸었는데 목표치의 지속적 증가를 보이려고 무리한 것 같다. 정책목표의 내용이 상당히 흐트러져 버리는 나쁜 효과 우려된다.
 - 참고로 독일은 제조기업수가 한국과 거의 같은 30만개 정도이며 그 안에서 혁신형 기업으로 조사한 것이 3만여개이다. 그래서 10%이다.
 - 한국이 생산인구와 절대인구가 감소하는 2030년에 가서 제조기업 3만개 혁신기업을 달성한다면 충분히 우수한 산업구조를 가진 것이 될 것이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소자고령화 및 중국추격) 한국도 그 때쯤이면 제조기업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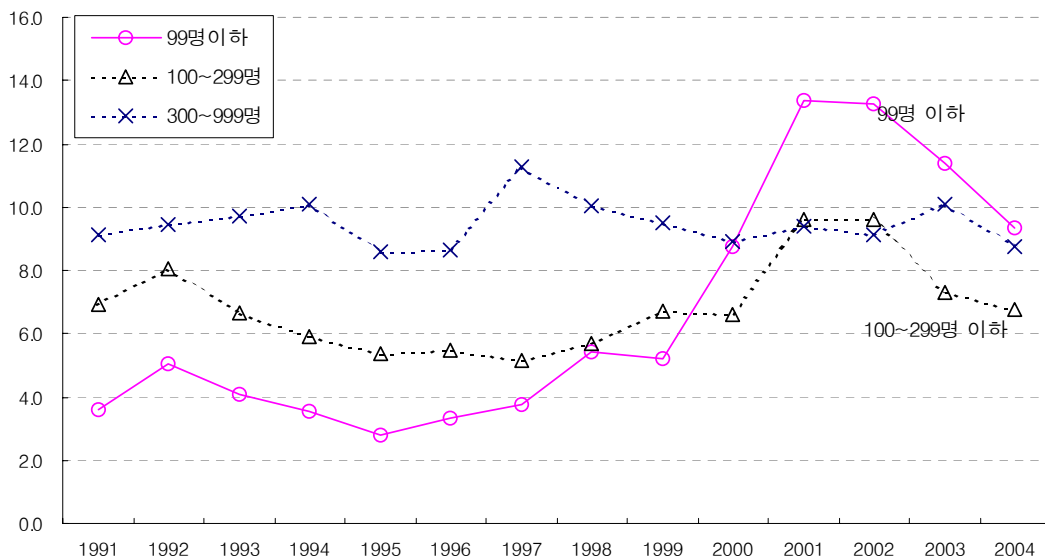
감소할 것이다. 그런 속에서도 3만개 혁신형 중소기업을 우리가 가진다면 중국추격을 벗어나 있다는 뜻이 될 것이다.

<그림> 중견, 중소기업체의 연구개발비 추이



자료 :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과기부

<그림> 중소기업체의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자료 :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과기부

- 또한 부품소재기술에서 일본을 매우 빠르게 추격하고 2030년에는 추월하는 식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희망사항이라면 모를까 정책목표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

- 현실적으로 중소 중견기업들이 2000년 이후에 R&D가 정체 상태에 머물고 있고 대일부품소재무역적자 폭은 조금씩 이나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역전의 로드맵이 매우 치밀하지 않는 한 어렵다. 재조정이 필요하다. 적어도 일본의 90% 추격 시점이 현재 설정치보다는 좀더 뒤로 봐야 그나마 현실적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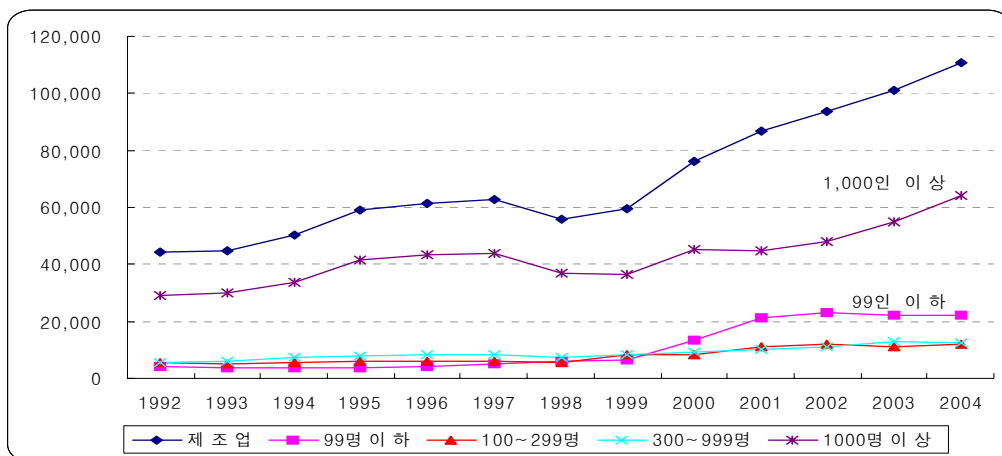
11. 이러한 상황 인식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정책대안으로 이번 비전2030에서 논의되었으면 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인적자원 고도화 지원이다.

- 이미 비전2030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금융지원 중심에서 경영컨설팅과 인력양성 등 콘텐츠 중심지원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하지만, 이 비전의 인적자원 고도화 부문을 보면 대개가 대학과 연계된 사항만 주목하고 있고 중소기업에게 인적자원 특히 대졸이상의 산업기술인력과 연구인력의 지원에 대한 구상은 안 보인다.

12. 현재 한국의 중소기업의 R&D 형태를 분석해 볼 때, 연구비지원은 한계에 달하고 있고 연구할 수 있는 밑그릇을 키워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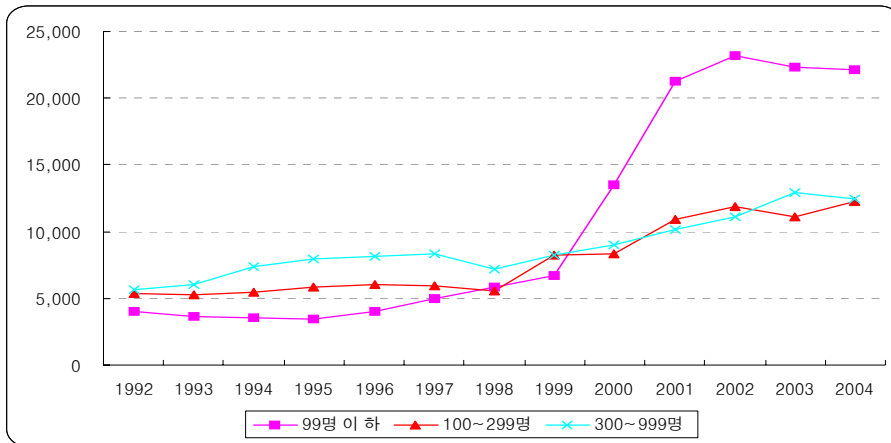
- 즉, 중소기업 인력의 “질적 고도화”를 강력하게 추진해야만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고 본다
-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비 지원이 꾸준히 증가해 온 추세 속에서 오히려 중소기업의 연구자수는 2000년대 들어 정체 내지 하락하고 있다

<그림> 종업원 규모별 연구원수 추이(제조업)



자료 :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과기부 자료

<그림> 중소기업체의 연구원수 추이



자료 :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과기부 자료

- 특히 종업원 99인 이하의 기업체의 경우, 2002년 이후부터는 전체 연구원수의 하락을 반영하듯 모든 학위에서 연구원수가 하락하고 있다. 2005년도 실제치통계가 곧 발표될 것인데, 여기서도 동일한 추세로 확인된다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그것이 비전2030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13.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정책안으로 고려해 봐야 하는 것은 독일식으로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채용 인건비 보조사업”을 향후 10년간 대량으로 강력하게 확대 추진하는 것이다.
- 오늘날 독일의 중소기업이 세계시장점유율 1위 상품수가 가장 많은 국가로 될 만큼 중소기업에 폭넓은 기술력이 갖춰진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 9년간 실시한 상기 사업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독일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
 - 현재 한국도 중소기업청이 동일한 사업을 2005년도부터 실시하고는 있는데 그 지원규모가 연간 400여명 수준이다. 이를 적어도 10배 정도는 증대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적게 조금씩 증대시켜서는 효과가 별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 소요예산은 R&D자금지원사업의 효율화로 절감하는 몫으로 감당할 방안을 강구하면 좋겠다.

[참고] 중소기업 연구개발인력 인건비 지원프로그램(PKZ프로그램)

- PKZ프로그램은 1979-1987년까지 9년간 총 약 32억 마르크를 지원한 대규모 중소기업 지원책이었으며, 독일 중소기업지원정책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대책으로 평가되고 있음.
- 종업원 500인 이하, 연 매출액 5,000만 마르크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2만 마르크 한도 내에서 연구개발인력 총급여의 40%를 지원 (1984년부터는 종업원 3,000명 이하 연 매출 3억 마르크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인력확충지원을 시행, 즉, 한국의 중소기업보다 더 큰 기업들도 지원하였음)
- PKZ프로그램은 1979-1986년 연방정부가 민간부문 연구개발지원에 투입한 총지출액 가운데 평균 10%를 차지
- 또한 PKZ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혁신지원에 투입한 총지출액의 약 절반을 차지
- 마찬가지로 연방경제부(BMW)가 중소기업지원에 투입한 총지출액의 절반을 PKZ프로그램이 차지
- 이처럼 “대대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2만 여개의 중소기업이 PKZ프로그램의 연구개발인력 인건비 지원을 받아 전체적으로 약 38,000명 이상의 연구개발인력이 증가하였으며, 상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수도 1/3 이상 증가하였음.
- 종업원 20-499인의 제조업 중소기업 가운데 약 40%가 PKZ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

<PKZ프로그램의 시행 실태, 1979-1983>

연도 \ 분류	1979	1980	1981	1982	1983
예산(100만 DM)	300	355	361	390	375
접수신청건수	4,821	6,431	6,766	7,018	8,219
신청액 합계(100만 DM)	375.5	458.6	474.5	367.9	422.3
승인건수	4,546	6,163	6,486	6,698	7,866
총지원액(100만 DM)	320.3	408.4	438.3	337.3	390.9

자료: F.Meyer-Krahmer (1984), Wirkungsanalyse

[토론] 혁신주도형 경제를 위한 전략과 과제

주 현 (산업연구원)

- 혁신주도형 경제를 위한 전략과 과제라는 관점에서 볼 때 중소기업의 창업과 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경제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상당수 대기업들은 이미 혁신을 성장의 주요 원천으로 삼고 있으나,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생산성이 낮고 단순 하도급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임.
 - 대기업이 혁신주도형 경제를 선도하고 있지만 대기업만으로는 우리 경제 전체가 혁신주도형 경제로 이행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함. 그렇다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야말로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핵심과제라고 볼 수 있음.
- 중소기업은 향후 성장동력의 확충이라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나 건전한 시장경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기업의 고용창출능력은 크게 저하되었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유지 기능이 중요해지고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유일한 대안으로까지 부각하게 되었음.
 - 대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른 부작용으로 경제의 독과점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창업과 성장은 경제의 독과점화 경향에 대한 대항력으로서 시장경제의 활력을 유지시켜 줄 것임.
- 향후 중소기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기업가정신에 기초하여 부품소재산업과 지식기반산업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할 것임.
 - 1997~98년 경제위기 이후 벤처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되고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은 향후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근거로 간주될 수 있음.

- 이를 위해 시장친화적인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환경이 조성되고 중소기업 혁신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 금융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중소기업 금융에서 더 큰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임.
 - 중소기업 기술금융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중소기업 기술금융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함.
 - 기술금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기술금융시장 조성과 관련하여 정부가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아직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정부는 중소기업 R&D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야 하며, 지원규모 확대와 더불어 그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최근 중소기업 R&D 투자 및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규모 증가에 비하여 투자 효율성 및 지원 효율성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에 대응하여 산업인력 공급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 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성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려면 전문인력이 혁신형 중소기업에 원활하게 공급되어야 함. 1997~98년 경제위기 이후 전문인력의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제고되었으나 벤처거품 붕괴 이후 전문인력의 중소기업 기피현상이 다시 심화되고 있음.
 - 우리 경제의 전문인력이 대기업, 공공부문(공무원, 공기업 등), 교육부문에 과잉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혁신형 중소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 중소기업의 기능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성인력, 고령인력의 기능인력화를 추진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여건조성에 힘써야 함.
 - 다양한 공적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확충할 뿐만 아니라 여성인력 및 고령

인력의 취업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개선과 인프라구축이 수반되어야 함.

- 한편, 중소기업정책뿐만 아니라 산업정책 전반에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정책목표의 하나로 간주될 필요가 있음.
- 우리 경제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고 제조업체의 해외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의 정책적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 중소기업정책 혹은 산업정책에서 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기능이 중시되어야 함.

[토론] 혁신주도형 경제를 위한 전략과 과제

백성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 주제발표문에 포함된 정책방향 및 방안들은 이 분야 전문가 및 실무담당자들의 많은 고민을 거쳐 설정·제시된 것으로 판단함. 토론자는 토론자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주제발표문에서 다소 미흡하게 다루어졌거나,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I. 인적자원 고도화의 필요성

- 출산율 저하, 고령화, 근로시간 단축 등의 변화는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사람과 부가가치 생산시간의 감소를 의미하며, 이는 생산가능인구 개인당 경제 부담의 증가를 뜻함. 이는 1인당 부가가치 생산력을 획기적으로 증대하고, 성장세가 크고 부가가치 생산능력이 높은 산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
 - 우리나라 노동인구 1인당 노동생산성: 미국의 41% (2004)
 - 사업서비스 분야의 생산성: 1975년 GDP 대비 0.8% → 2001년 GDP 대비 3.4%
- Digital Divide 심화, 저임금 국가의 급부상, 기술집약 산업의 중요성 증대, 세계화 등은 교육·훈련기회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제고, 고급 두뇌인력 양성 등의 필요성 제기

II. 정책방향 및 정책방안

1. 정책방향

- 큰 정책방향으로 '리더십' 부문에서 민간주도, 시장자율을, 그리고 인적자원 부문에서 '창조적 인재'를 설정한 것은 바른 방향이라고 판단

2. 정책과제

□ 교육과정개발(curriculum development) 관련 정책과제 필요

- 노동시장에서의 기술·지식 수요, 사회·문화 등의 빠른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자기학습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현행 교육과정과는 다른 새로운 교육과정이 필요함. 특성화 학교, 학제 개편 등 논의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임.
 -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능력
 - 자신의 감정·느낌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 공동체 일원으로 협력·희생·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능력
 -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등
- 국가적 차원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전면적인 개편이 이수과목수 및 교과내용의 축소 조정과 함께 시도되어야 할 것임.
- 단위학교 및 교사의 교육과정,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의 자율권 확대 필요
- 교육과정이 학생·학부모, 기업, 사회 등 교육수요자의 수요에 맞게 기획·편성·운영되기 위해서는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신장되어야 하며, 교원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종합적·과학적 교육·훈련 평가시스템 구축·운영 필요

- 학생·학부모가 그리고 기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학교/직업훈련기관이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 예를 들어, 학교 및 교사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제공되고 교육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교육 공급시장에서의 경쟁이 공정해지고, 시장기제의 적용을 통하여 이루고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 학교/직업훈련기관, 교장, 교사, 교육과정/훈련기준 및 교육·훈련 수행 결과(+교육/직업능력개발정책)에 대한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평가 결과가 공개될 필요
- 평가 결과에 근거한 행·재정 조치가 이루어지는 제도 확립 또한 중요. 즉, 교육·

훈련정책의 책무성을 담보하는 기제 확립 필요.

- 예: 평가결과의 개인 인사(연봉, 승진 등)와의 연계, 평가결과의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와의 연계 등

재직근로자 재교육·훈련 기회 / 평생학습기회 다양화 및 확대를 위한 기업 협력 유도 방안 필요

- 회사측의 적극적 지원이 전제되어야 재직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이 가능(예를 들어, 근무시간 중 수강 허용, 일정기간 휴직 후 복직 허용 등)

- Fast Track 방식의 지원책 강구 필요: 재정, 행정지원(수요 조사,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Demand-side finance 정책 방안에 대한 사전 정책분석 필요

- 우리나라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voucher, 학자금 융자제도, 장학금 제도 등을 운영하는 것이 학교교육의 효과성 제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인가? 이러한 방안들이 성공하기 위하여 충족되어야 할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검토 필요

Ⅲ. 질문

교육·인적자원 미래와 관련하여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는 바(pp.20-21), 이들 시나리오가 인적자원 고도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설정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설명 필요

- 시나리오 #1의 경우, 10년 단위의 계획 내용들이 너무 느슨하게 제시된 인상. 예를 들어, '대학구조고도화 종합계획'은 2010년까지 우선 수립하여야 할 과제.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능/역할의 재정립과 관련하여 주제발표문 p.20과 p.25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나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봄.

- 대학부문의 개혁, 재직자 훈련·평생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역할은 어떻게 재정립될 수 있는가?
-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 기능을 '인적자원개발회의'(향후 '국가인적자원위원회')가 담당하고, 초·중등교육 관련 기능은 별도의 중앙조직이 지방당국과 역할을 분담한다고 하였는데, 무슨 의미인가?

[토론] 혁신주도형 경제를 위한 전략과 과제

안덕근 (서울대학교)

1. 정부의 산업육성정책에 관한 역할의 재정립 필요성

- 70-80년대 경제개발시기에 채택된 전통적 형태의 산업에 대한 직접 지원방식은 WTO체제하에서 금지보조금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바, 보다 시장중립적인 지원형태로 개선될 필요성이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차세대성장동력사업 등을 통해 첨단산업 부문에 있어서의 연구개발 역량 육성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으로 판단됨.
- 그러나, 여전히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차세대성장동력사업에 대해서는 WTO 보조금협정 규범 하에서 통상마찰의 소지가 있어 향후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주의해야 할 부분임. 특히,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보조금 문제에 관한 한 집중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고 제반 보조금 관련 무역제한조치의 대상이 되어 온 바 있음.
-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우리 산업부문의 기술역량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은 상용화, 실용화 등 직접적인 산업정책적 성격보다는 민간투자를 구축하지 않고 시장실패가 큰 부분에 있어 시장중립적으로 원천기술 개발 위주로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함.

2.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수립 필요

-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는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해 온 우리경제의 선진화에 필수적인 명제임.
- 서비스산업 경쟁력 개선을 위해서는 제반 국내규제의 대폭적인 개선과 글로벌 기준의 전면적 수용이 필요함.
- 또한, 서비스시장의 개방을 통한 선진서비스산업의 유입이 국내서비스산업의 체질과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이러한 측면에서 한-미FTA는 중대한 의의

를 가지고 있음.

- 이러한 서비스산업 시장개방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시장개방과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성립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FTA 또는 WTO를 통한 시장개방 추진과는 별개로 국내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3.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안정적인 시장환경 조성 필요

- 우리 경제구조상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주요 경제권의 시장확보 뿐만 아니라 긴밀한 산업분업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 따라서, 다각적인 산업협력구조 확립을 위해서 FTA 또는 기타 경제협력협정 체결 등을 통해 국제적 경제유대관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중국에 대한 우리의 경제의존도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감안할 때 경제유대관계를 다각화할 필요성이 큼. 특히,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조정을 기하는 현 시점에서는 주력시장이 여전히 구매력과 기술력이 높은 선진국 시장이 되므로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과의 시장개방에 주력해야 함.

[토론] 혁신주도형 경제를 위한 전략과 과제

박정동 (인천대학교)

최근 동북아 경제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국가보다는 크고, 세계보다는 작은 국가연합체의 형성이 가속화 되고 있는 21세기 시대의 조류에 비취 볼 때 대단히 미래지향적인 제안이라 여겨진다. 특히 한반도, 중국, 일본등을 포함한 동북아시아는 역사적·문화적으로 가깝고, 인종적으로도 가까운 이웃나라라는 점을 생각하면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향한 공동작업도 상대적으로 한결 수월할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 아울러 지금과 같은 발달된 교통(운수와 통신)과 생산력 아래에서는 동북아시아 각국의 영토만으로는 지나치게 좁을 뿐 아니라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보다 넓은 국토에 적합한 국경을 초월한 경제통합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도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의 논의는 경제적 합리성도 충분히 있다고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형성은 시대적 조류임과 동시에 해당국 모두의 필요사항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형성은 동북아 각국에 있어서 Win-Win 게임이기 때문이다. 먼저 일본의 관점에서 보면 불황에 허덕이는 일본이 재정정책이나 화폐정책과 같은 부분적인 수술로 경기회복을 꾀할 수는 있지만, 현재의 일본은 이러한 방식으로 치유되기에는 불가능할 정도의 증명을 앓고 있다.(심각한 인구의 고령화 등). 대대적인 조직혁신(Organizational Innovation)이 필요한 시기이자 외부 국가들과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중국 역시 현재는 외국의 私的資本에 대한 개방에 치중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즉 중국이 기대하는 경제건설을 위한 기초산업에 대한 투자가 미비하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자본을 유치하고 당면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근린국들과의 밀접한 협력관계가 요구된다.

한국은 IMF 사태라는 급박한 유동성 위기로부터 탈출은 이루어 진듯 하나, 여전히 폐쇄적 국민성, 빈약한 첨단산업기반 등으로 인해 21세기 한국경제의 청사진

이 불투명하다. 아울러 남북한간의 대치국면의 장기화 역시 한반도 정세를 극히 불안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노동수요의 창출, 첨단기술의 개발, 남북한간 긴장의 완화 등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이 지역은 자원과 노동, 자본과 기술이 각각 서로 다른 국가로 偏在되어 있기 때문에 一國內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 상호협력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을 훨씬 높일 수 있다. 그래서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결성은 이 지역의 경제 성장의 기본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동북아 각국 모두에게 WIN-WIN게임이라 할 수 있는 경제공동체형성을 실현시키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만 할 것인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불안한 지역이라 할 수 있는 한반도, 그것도 판문점 주변지역에 분야별로 각국의 정부, 경제계, 학계에서 파견된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 동북아 경제공동체 협의회를 상설조직으로 구성하고 여기에 관련 각국들은 공동출자, 인력파견등을 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협의회에서는 수십년에 걸친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작성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각 부분별로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액션 플랜도 대단히 치밀하게 작성해야만 할 것이다. 아울러 협의회에서는 동북아 국가들의 대부분이 참여하게 되는 경제공동체의 경우 나라마다 직면한 정치·경제상황이 상이하게 분포할 것이므로 이를 미세조정(fine-tuning)할 수 있는 심도 깊은 논의와 필요한 경우 부설기구의 설립도 요구된다. 그리고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는 각국별로 상이한 상품에 대한 규격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고, 동북아 경제공동체 운영을 위한 관료들의 교육기관을 설립, 교육시스템의 정비를 통해 각국 고등교육의 수준을 균등화시키는 노력들도 필요하다. 이러한 제 노력들은 궁극적으로는 회원국내 노동시장의 완전개방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유럽 경제공동체가 성공한 결과 유럽연합이 탄생한 것과 같이, 동북아 경제공동체도 성공하게 되면 경제부문 이외의 부문까지도 포함하는 종합공동체로 확대 발전될 것이다. 왜냐하면 생활풍습, 종교, 문화 등에 있어서는 그 선택이 완전 자유지만 공동체의 역사가 길어지면 자연발생적으로 회원국들의 풍습, 습관 등이 융합되면서 공동체 특유의 문화가 형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유럽 경제공동체의 경우 물자와 사람의 교류가 대폭 증가하면서, 문화도 교류되게 되고 그 결과, 문화는 자연스럽게 혼합되어 一様化되고 있다.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결성 그리고 더 나아가 동북아 공동체의 결성은 비록 상이한 정치 경제 제도를 위시한 수많은 난제를 안고 있긴 하지만 이의 실행은 피로 얼룩진 이 지역의 역사에 대한 종말을 의미함과 아울러 21세기를 맞이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일임과 동시에 반드시 해야만 할 일이기도 하다.